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복지학석사학위논문

복지지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
: ‘물질적 희생’에 대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2015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최 고 은

복지지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

: ‘물질적 희생’에 대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안 상 훈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최 고 은

최고은의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6월

위원장	김 태 성	(인)
부위원장	구 인 회	(인)
위원	안 상 훈	(인)

국문초록

복지지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 : ‘물질적 희생’에 대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최 고 은

분배의 주요 기제로서 복지정책은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과 이들의 세금으로부터 혜택을 제공받는 수급자가 일치하지 않기에 다양한 분배 장치들에 대한 기여자의 동의와 이해는 필수적이다. 이에 복지제도를 둘러싼 시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발현되는 복지인식을 파악함과 동시에 기여자들의 동의와 이해를 이끌어내는 매커니즘을 밝히는 것 또한 중요하다.

관련하여 Hetherington의 ‘물질적 희생이론(material sacrifice theory)’은 재분배정책유형에 따라 한 개인이 가지는 비용과 편익의 귀착범위가 달라지는데 일정부분 편익이 비용보다 큰 상황에서도 물질적 희생을 감수하고자 하는 성향은 각 개인이 가진 정부신뢰 수준에 영향을 받게 됨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바 있다. 본 연구는 해당 이론에 입각하여 복지지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각 개인의 정부신뢰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복지인식의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알려진 복지지위에 주목하

며, 한 개인이 다면적으로 접하고 있는 복지지위를 단일한 차원으로 측정하고자 복지부담-혜택 간 격차를 ‘물질적 희생(material sacrifice)’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물질적 희생’과 정부신뢰가 각각 ‘정부의 복지책임지지’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의 상호결합으로 구체화되는 복지인식에 가지는 주 효과와, ‘물질적 희생’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기제로서 정부신뢰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2013년 수행된 「한국복지패널 8차년도」에서 「복지인식부가조사」에 응답을 완료한 4,185명 중 가중치를 적용한 4,214명의 응답내용을 활용하여 수행되었으며, 연구가설의 통계적 검증은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지위에서 복지부담(조세 및 사회보험료지출)이 복지혜택(사회보험, 공공부조급여 및 각종 정부보조금)보다 커지는 ‘물질적 희생’이 증가할수록 ‘정부의 복지책임지지’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각각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적인 복지 편익이나 잠재적 수혜가능성이 동반되지 않은 일방적 복지부담은 정부의 복지책임 확대 및 재원 확충에 대한 적극적 행동의지를 저해하였다.

둘째, 정부가 사회정책을 유능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신뢰가 높아질수록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는 정(+)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사회정책에 대한 정부신뢰는 정부의 복지책임지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사회정책 능력에 대한 신뢰 감소는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한 요구를 견인할 수 있으나,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수용의사를 가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회정책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할 것이라는 믿음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물질적 희생’이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부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물질적 희생’이 ‘정부의 복지책임지지’ 및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

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을 완화하였고, 이는 Hetherington의 ‘물질적 희생이론(material sacrifice theory)’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물질적 희생’을 경험하는 집단 중 사회정책수행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자신의 물질적 이해를 다소 거스르는 방향의 정책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는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일차적 동기로서의 자기이해 역시 정부기능에 대한 믿음이나 기대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결과가 시사 하는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질적 희생’의 증가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확인됨에 따라, 복지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복지수혜범위 확대와 제도의 성숙을 통해 복지수급자로서 지위를 획득하는 사람의 수를 늘리고, 지위의 질을 고양해야 한다.

둘째, 정부신뢰가 복지인식에 가지는 주 효과뿐만 아니라, ‘물질적 희생’이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국민들의 사회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충하는 것은 물질적 희생을 감수하고 정책순응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정부의 복지책임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재원부담의지를 고양하기 위해서 본인이 낸 세금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며, 장기적 관점에서 본인에게 복지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회적 믿음이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복지에 대한 국민의 경험이 제한적인 한국 복지지형에서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능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복지대상자 확대를 통해 국민 일반의 복지체감도를 높여야하며, 조세부담이 본인에게 복지급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회적 믿음을 형성해야한다. 더 나아가 복지제도로부터 직접적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집단일지라도, 정부가 사회정책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고 있음을 확신해야한다. 이를 위해 해당 부처는 사회정책집행의 절차, 과정, 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직접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야하며,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재분배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친복지인식 확대를 견인할 것이라 기대된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들의 복지지위에서 발생하는 부담-혜택 간의 격차를 단일차원으로써 통합적인 측정을 시도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가 복지수급가능성에 따른 ‘잠재적인’ 물질적 희생에 주목하였다면, 본 연구는 복지제도 일반의 부담-혜택 간 격차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물질적 희생을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복지수혜자 혹은 부담자로서 가지는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물질적 이해관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상징적 요인으로 기존 복지인식 연구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정부 신뢰에 주목하였으며, 복지정치과정에서 발현되는 정부신뢰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또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제공된 정보를 통해 측정한 복지혜택과 달리, 복지부담의 경우 응답자 개인 보고에 의존하고 있기에 측정의 신뢰도에 다소 문제가 있으며, 2차 자료의 한계로 인해 ‘사회정책에 대한 기능적 신뢰’로 정부신뢰의 구성개념이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복지지위, 복지혜택, 복지부담, 물질적 희생, 정부신뢰,
복지인식

학 번 : 2013-22837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제기	1
제 2 절 연구문제	5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6
제 1 절 복지인식의 개념 및 차원	6
1. 복지인식의 개념	6
2. 복지인식의 차원	7
제 2 절 복지인식 결정요인에 대한 검토	11
1. 자기이해관계요인: ‘복지지위’	12
2. 인구사회학적 요인	16
3. 가구구성원특성 요인	17
4. 정치성향 및 가치관 요인	18
제 3 절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물질적 희생과 정부 신뢰 간의 상호작용: 물질적 희생이론을 중심으로 ...	20
1. 물질적 희생과 정부신뢰 간의 상호작용	20
2. 정부신뢰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	22
3. 물질적 희생의 개념 및 측정	26
4. 정부신뢰의 개념 및 측정	31
제 3 장 연구방법	35
제 1 절 연구모형설정	35
제 2 절 연구가설 도출	36
제 3 절 자료와 측정	38

1. 분석자료	38
2. 측정	39
제 4 절 분석방법	49
 제 4 장 연구결과	 51
제 1 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1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1
2. 연구대상자의 가구경제적 특성	52
제 2 절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55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결과	55
2.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복지인식	56
3. 변수 간 상관관계 결과	64
제 3 절 가설검증	68
1. 모형 1: 정부의 복지책임지지	68
2. 모형 2: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	73
 제 5 장 결론	 79
제 1 절 분석결과의 요약	79
제 2 절 논의	83
1. 정부의 복지책임지지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 간의 인식차이	83
2. 물질적 희생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	85
3. 정부신뢰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	86
4. 물질적 희생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 ..	88
제 3 절 연구의 함의	90
1. 이론적 함의	90
2. 정책적 함의	93
제 4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100

참고문헌	103
Abstract	116

표 목 차

[표 1] 주요변수의 정의 및 측정항목	46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2
[표 3] 연구대상자의 가구경제적 특성	54
[표 4]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 및 정규분포성 검토	56
[표 5] 연구대상자 특성별 정부의 복지책임지지도 차이	58
[표 6] 연구대상자 특성별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 차이	62
[표 7]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67
[표 8] 모형 1: 정부의 복지책임지지	72
[표 9] 모형 2: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	76
[표 10] 분석결과 요약	82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35
[그림 2] 물질적 희생-정부의 복지책임지지에 대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	78
[그림 3] 물질적 희생-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대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	78

제 1장 서론

제 1절 문제제기

본 연구는 복지지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각 개인의 정부신뢰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각 개인이 아울러 점하는 복지지위를 단일한 차원으로 측정하고자 복지 부담-혜택 간 격차를 ‘물질적 희생’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물질적 희생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기체로서 정부신뢰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민주국가에서 모든 정책과 제도들은 시민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정치적 조율과정을 통하여 형성된다. 분배의 주요 기체로서 복지정책은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과 이들의 세금으로부터 혜택을 제공받는 수급자간의 괴리로 상당한 정치적 긴장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Wilensky, 1976). 특히 복지프로그램은 기여자와 수혜자가 명확하게 구분되기에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분배의 장치들에 대한 기여자의 동의와 이해는 필수적이다. 이 같은 이유로 복지정책에 대한 강력한 대중적 지지는 정부의 재분배 노력을 추진하게 하는 필요조건이라 하겠다(Brooks & Manza, 2006).

급박한 경제위기, 사회적 위험의 증가 등으로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대중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복지증가는 요원하다. 이에 복지정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특정 복지제도에 대한 의증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제도, 복지국가의 정당성, 소득재분배, 복지비용에 대한 여론의 흐름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Taylor-Goob, 1985; 이중섭, 2009 재인용).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정도나 정부의 복지지출에 대한 동의로 표현되는 복지인식을 파악함과 동시에 이를 결정하는 매커니즘을 밝히는 것 또한 중요하다. 즉, 누가(who), 어떤(what)정책에, 어떤 이유로(why) 지지 혹은 반대를 표출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복지인식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흐름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요건 및 가치지향 등이 복지인식 및 제도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는 입장(안치민, 1995; Svallfors, 2002)이며 다른 하나는 복지제도를 둘러싼 공통의 이해관계나 복지에 대한 수요(needs)등이 중요하다는 입장(Pierson, 2001; 안상훈, 2000; 주은선·백정미, 2007)이다. 후자의 흐름은 개인이 복지국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기여자와 수혜자가 구분된다는 점에서 복지정치는 권리와 의무의 다면적 상호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안상훈, 2000). 이에 안상훈(2000)의 ‘복지지위론’에서는 가시적인 형태의 복지급여·서비스를 통해 권리를 향유하는 복지수급자와, 사회 전체 복지권 확대에 따른 비용부담 의무를 가지는 복지납세자간 복지인식의 균열을 탐색한다. 특히, 권리-의무를 둘러싼 복지인식 균열에서 한 개인은 복지수급자, 복지납세자간의 지위를 다면적으로 점하고 있기에, 정책 영역과 대상에 있어서 자신의 물질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지지 및 반대 입장을 결정할 것이다. 사회 전체 복지권 신장에 따른 재정적 의무 증대는 사회구성원의 납세 부담을 증가시킨다. 이 때 현재적인 복지 편익이나 잠재적 수혜가능성이 동반되지 않은 일방적 복지의무 증대는 복지납세자의 물질적 희생의 가능성을 높여, 해당 정책 및 복지제도 일반에 비우호적 인식을 가지게 할 공산이 크다(Hetherington, 2005; Rudolph & Evans, 2005).

그렇다면 기여자들의 동의와 이해를 이끌어내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가? 복지 권리-의무 간 동태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담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각 개인이 모두 동일한 수준의 반(反)복지인식을 가지는가? 그 해답으로 Hetherington(2005)의 ‘물질적 희생이론(material sacrifice theory)’은 기여자들의 정책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으로 정부신뢰에 주목한다. 그는 재분배정책유형에 따라 한 개인이 가지는 비용과 편익의 귀착범위가 달라지는데 일정부분 편익이 비용보다 큰 상황에서도 물질적 희생을 감수하고자 하는 성향은 각 개인이 가진

정부신뢰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이 이론에 근거하면, 복지 확대에 의한 물질적 희생을 주로 부담하게 될 집단은 복지확충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그 중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신뢰를 가질 경우, 반(反) 복지성향은 다소 완화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신뢰와 복지지위와의 동태적 관계에 따라 복지태도는 달라질 것이다.

‘물질적 희생이론(material sacrifice theory)’에서 물질적 자기이해를 거스르게 하는 정치적 요인으로 주목한 정부신뢰는 ‘정부가 산출하는 각종 산출물에 대한 평가’, 즉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잘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 정향’(Hetherington, 1998)이다. 각각의 정책내용이 갖추어야 할 규범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민들은 정부성과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게 되며, 이는 정부의 공공정책 산출에 대한 승인-불승인으로 이어진다.(Muller & Zucam, 1977). 이에 본 연구는 ‘기술적으로 유능한 정부 역할수행에 대한 기대’인 기능적 신뢰에 주목하여(Barber 1983), 각종 사회정책에 대한 평가 정향이 복지정책의 집행과정에서의 동의와 순응을 이끌어내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특히, 복지확대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세금부담 증대를 의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복지수혜범위 확대와 제도의 성숙을 통해 개인이 미래의 잠재적인 복지수혜자가 될 가능성을 동시에 증가시키기도 한다. 이에 복지확대 상황에서 개인은 자신의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이익, 그리고 개인적 이익과 전 사회적 이익이 충돌하는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김신영, 2010). 복지확대에 대한 개인의 득실을 일종의 ‘사회적 딜레마’ 상황으로 규정한다면, 모든 개인은 개인의 장·단기적 이익, 그리고 전 사회적 이익 및 비용을 모두 감안하여 복지태도를 결정할 것이다. 이 때 복지지형을 둘러싸고 혜택보다 부담이 큰 상황에서 각 개인에게 ‘자기피해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는 정부의 능력과 선의에 대한 믿음’(Mayer et al., 1995)이 존재한다면, 자신의 물질적 이해를 뛰어넘어 복지정책에 대한 동의와 순응을 표방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복지제도를 둘러싼 부담(월평균 조세 및 사회보험료지

출)과 혜택(월평균 사회보장급여액)의 비교를 통해 복지지위 상의 ‘물질적 희생’의 수준을 측정하고, 이것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정부신뢰가 어느 정도 상쇄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복지지지 및 반대로 표출되는 복지인식을 광의의 개념으로 측정해보고자 한다. 광의의 복지인식은 개개인의 복지정책에 대한 주관적 가치판단에 국한하지 않고, 가치판단에 따른 행동지향성까지로 그 의미를 확대하여 정의한다(Berger & Ullrich, 2009). 이때의 행동지향은 ‘복지수용(acceptance of the welfare state)’의 개념으로 표현이 가능하며, 복지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비용부담의사를 포함한다. 앞서 복지제도를 둘러싼 물질적 이해관계가 복지지지 및 반대수준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한국의 잔여적인 복지제도로 인해 복지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집단이 복지국가의 편익, 비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대해 일관된 견해를 발전시키기 매우 어렵다(주은선·백정미, 2007). 특히 복지확대흐름에는 찬성하여 복지에 대한 정부책임을 강조하고 복지예산확충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지만,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은 다소 꺼려하는 ‘비(非)일관적’ 대중인식이 여전히 팽배하다(Bonoli, et al. 2000; 김영순·여유진, 2011). 이는 복지확충에 대한 동의와 비용부담의사 간 지지 및 반대의사가 일관되지 않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지 부담-혜택 간 격차에서 발생하는 ‘물질적 희생’이 ‘정부의 복지책임지지’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나누어 탐색함으로써, 한국인의 복지인식에 배태된 다차원적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복지지위론’과 ‘물질적 희생이론’에 입각하여 복지지위에서 발생하는 각 개인의 물질적 희생수준이 ‘정부의 복지책임지지’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부신뢰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복지정치맥락에서 정부신뢰가 단순히 국민들의 규범적 판단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경제적 이해를 거스르면서도 ‘물질적 희생’을 감수하는 방향으

로 정책태도를 표방하게 하는 정치적 원동력이 되는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복지정책 수립 및 집행에서 혜택과 부담에 매우 민감한 수혜자와 기여자 간 ‘정치적 긴장’을 완화하는데 있어 정부신뢰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을 본 연구의 의의라 하겠다.

제 2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복지인식의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알려진 복지 부담-혜택 간 복지지위에 주목하며, 한 개인이 다면적으로 점하고 있는 복지수급자-납세자 지위 상의 ‘물질적 희생’이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물질적 희생’이라는 단일변수로 측정된 복지지위가 복지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정부신뢰가 복지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마지막으로 복지지위에서 발생하는 ‘물질적 희생’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정부신뢰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복지인식은 ‘정부의 복지책임지지’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로 나누어 측정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1. 복지지위가 복지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정부신뢰가 복지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3. 복지지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정부신뢰 수준에 의해 조절되는가?

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제 1절 복지인식의 개념 및 차원

한 사회의 복지제도의 구성과 변화는 해당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결과이다. 이러한 정치적 결정에서 사회구성원의 사회복지에 대한 신념, 가치, 태도 등은 복지문제를 정의하고 어떤 제도를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김영순·여유진 2011; 김사현·홍경준 2010). 특히 한국 사회구조의 급속한 변동과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와 관심을 증대시켰으나, 한편으로 복지제도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이해의 전면적 충돌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과도기적 경향성은 복지인식이 사회복지제도에 구현되고 다수의 사회구성원의 공유로까지 발전되는데 큰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제도의 강화 또는 약화를 둘러싼 갈등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복지인식 및 태도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1. 복지인식의 개념

일반적으로 인식이란 경험하고 있는 심적 현상의 총체로서 특정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가지는 지속적인 신념이며, 특정대상과 상황에 대한 우호적이거나 비우호적 반응을 의미한다(Rokeach, 1973). Rokeach의 ‘신념체계이론(belief system theory)’에 따르면 첫째, 인식이란 인지적, 선호적, 행위적 요소를 구성하는 신념의 하위체계로서 특정대상과 상황에 대한 선호여부를 나타내며, 둘째, 일시적인 선호를 나타내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지속성을 띠고 있다.

이와 같이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인지 및 선호여

부’를 인식으로 정의한다면, 복지인식은 사회구성원들에게 공유되는 제반 복지정책이나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가치 지향이나 신념(태도)을 의미한다. Taylor-Gooby(1985) 역시 복지인식을 ‘전반적인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지지여부, 복지비용의 문제, 복지국가정당성 등에 대한 사회적 흐름 내지 사회적 태도’로 규정한바 있다.

이상과 같이 복지인식은 대상, 주체, 구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째, 시민들의 복지의식은 일반적 의식에서부터 복지비용, 복지제도의 정당성, 복지프로그램의 선호도 및 지속성 등 사회복지체계의 구성적 특성 등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둘째,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복지정책을 바라보는 인식적 주체를 의미하며, 국민, 정치엘리트, 관료, 전문가집단 등 다양한 집단들은 분화된 복지인식을 공유한다. 셋째, 구성적 측면에서 복지의식은 가치, 태도, 행동지향을 포함하고 있어 가치지향성과 인간의 행위와 연결되는 행동성향의 개념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박미옥, 2005).

2. 복지인식의 차원

실제 경험적 연구들에서 복지인식은 어떤 하위개념들에 주목하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복지인식의 구성범주는 복지인식의 정의 및 측정과 관련된 문제로써 복지인식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Rokeach의 ‘신념체계이론(belief system theory)’에 기초한 복지인식은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제도를 대상으로 한 가치, 태도, 행동지향 등을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광의의 복지인식은 개개인의 복지정책에 대한 주관적 가치판단에 국한하지 않고, 가치판단에 따른 태도 및 행동지향성까지로 그 의미를 확대하여 정의된다(Berger & Ullrich,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도 복지인식을 가치차원과 태도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1) 가치차원으로서의 복지인식

가치는 규범적 또는 도덕적 신념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행위의 선택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준거 틀이다(Rokeach, 1973). 이에 복지와 관련하여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는 복지의식을 규명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복지와 관련된 가치는 크게 ‘복지 친화적(pro-welfare) 가치’와 ‘반복지적(anti-welfare)가치’로 대별된다(Coughlin, 1980). ‘복지 친화적 가치’로는 집합주의, 사회적 결정주의,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보장성, 절대적 평등, 휴머니즘 등이 있으며, ‘반복지적 가치’로는 개인주의, 적자생존의 논리, 불평등이나 실패에 대한 개인의 책임 등이 있다. 사회복지 확대와 축소를 둘러싼 논쟁의 기저는 바로 이와 같은 가치대립을 전제하고 있다. 복지를 둘러싼 위의 두 가치치원을 크게 개인주의(individualism)와 집합주의(collectivism)로 분류할 경우, 전자는 개인책임과 노동윤리를 사회복지의 주요 운영원리로 삼으며, 후자는 상호호혜성 또는 공동체주의(communalism)에 입각한 원조행위를 강조한다(최균·류진석, 2000).

복지에 대한 개인주의(individualism)와 집합주의(collectivism)의 가치는 복지책임주체의 역할분담의 논의로 이어진다. 즉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은 복지공급주체에 대한 선호여부를 의미한다. 즉,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최저한의 수준을 보장하고, 복지 위험 및 욕구에 대한 대응에 주된 책임을 가지는 주체에 대한 선호를 말한다. 즉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 역시 개인주의, 집합주의라는 사회적 가치의 연장선상에서 개인책임과 국가책임이라는 연속적인 스펙트럼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개인선택의 자유, 경쟁 등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주의(individualism)는 사적 복지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평등, 연대성, 상호호혜 등에 기초한 집합주의(collectivism)는 공적 복지책임을 강조한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개인, 가족, 지역사회, 시장, 국가 등 다양한 복지책임주체 간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왔다(Johnson, 1987). Johnson(1987)은 사회복지를 ‘원조활동을 둘러싼 행위양식’으로 보

고, 이러한 행위양식을 수행하는 책임주체를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 시장중심의 상업부문(commercial sector), 비영리조직에 의한 자발적 부문(voluntary sector), 그리고 국가·법정부문(statutory sector)등으로 나눈바 있다. 과거 복지확대국면에서는 개인 및 가족책임으로부터 국가책임으로의 역할이 확대된 반면, 경제위기 및 경쟁원리의 강화에 따라 복지국가 위기 이후 재구조화국면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생산과 전달과정에서 조력자로서 국가역할의 강조, 국가책임의 분산화, 공급주체의 다원화 등의 경향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정치경제적 환경에 따라 복지책임주체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빈곤, 실업, 질병, 교육, 노령, 장애 등의 사회적 위험 및 욕구를 주로 대응할 복지공급주체에 대한 선호도나 국가에 의한 복지기능에 대한 정당성 인식 정도는 복지인식의 유형을 구분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 태도차원으로서의 복지인식

복지인식과 관련한 또 다른 중요한 차원은 복지태도(welfare attitudes)이다. 태도란 특정대상과 상황에 대해 가지는 선호 반응이나 행동을 의미한다(Pettersen, 2001). 이와 같이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가지는 우호적 혹은 비우호적 반응 여부’를 태도로 본다면, 복지태도는 복지일반에 대한 선호여부의 반응이나 행동을 의미한다. 광의의 복지인식은 개개인의 복지정책에 대한 주관적 가치판단에 국한하지 않고, 가치판단에 따른 반응이나 행동지향성까지로 그 의미를 확대하여 정의한다(Berger & Ullrich, 2009). 이때의 행동지향은 복지수용(acceptance of the welfare state)을 위한 실천의지로 표현이 가능하다.

즉 복지의 제반내용에 대한 선호여부의 반응을 의미하는 복지태도는 실천행위를 매개하는 행동성향으로 구체화된다. 복지정책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기부행위, 복지재정확충에 대한 동의, 복지재원부담의 적극성,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수용의지 등의 실천적 행위를

매개하는 ‘복지실천의지’로 표출된다(Andre B & Heien, 2001; 박미옥, 2005; 주은선, 백정미, 2007). 이에 본 연구에서 ‘복지실천의지’는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동의하는 것과 더불어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 의사를 묻는 것으로 복지에 대한 재정적 지지견해와 함께 지불능력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적극적 행동의지로 정의한다.

복지인식을 다룬 기존연구에서도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정도’,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출 동의’,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 등의 지표로 복지인식을 측정한 바 있다(Andress and Heien, 2001; Svallfors, 1995; van Oorshot, 2000; Pettersen, 2001; 박정옥, 2005; 주은선 · 백정미, 2007). Coughlin(1980)는 사회문제의 원인과 해결, 개인성패의 결정요인, 사회보장방식, 사회정책의 목적, 사회적 약자의 보호여부 등을 중심으로 복지친화성(Pro-welfare)와 반복지성(Anti-Welfare)의 복지태도를 연구하였으며, Andre B & Heien(2001)은 복지태도를 복지국가의 기능, 수단, 효과 및 재정의 4단계 차원에서 분류하고 ISSP의 문항을 활용하여 빈부격차 해소, 실업문제 해결, 최저생계보장 3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정부의 복지개입 필요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Blekeasaune & Quadangno(2003) 또한 직업보장, 의료보호, 최저생계보장, 노인생계보장, 빈부격차해소 등 총 5가지 영역에서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바 있다.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정도와 함께 복지확대에 대한 동의 및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까지 확대하여 복지인식을 살펴본 연구도 있다.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는 복지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실업, 교육, 연금, 의료정책 등 총 네 가지 형태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책임의 정도와 재정지출 동의여부를 물었고, Pettersen(2001)은 복지영역에 따라 원하는 복지지출수준과 이를 위한 세금부담의사를 물었으며 조돈문(2001), 박미옥(2005), 주은선 · 백정미(2007)등은 복지기능의 정당성, 복지정책공급 책임의 주체성, 복지재정확충에 대한 인식,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복지책임주체와 복지실천의지가 결합된 총체적인 복지인식을 연구한바 있다.

위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복지인식을 가치차원과 태도차원의 상호결합으로 구체화되는 일련의 신념체계라 정의하고자 한다.

제 2절 복지인식 결정요인에 대한 검토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흐름은 크게 개인의 인구사회학적특성 및 개인의 가치지향이 복지인식 및 태도를 결정한다는 입장, 인구사회학적 조건보다 사회제도를 둘러싼 공통의 이해관계나 복지에 대한 수요(needs) 등이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성별, 연령, 세대, 교육수준 등 각종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강조한 연구들은 한 시대를 살아오면서 겪은 고유한 경험을 통해 형성된 개인의 가치관과 이념적 성향이 복지에 대한 상이한 인식으로 표출된다고 주장하였다(안치민, 1995; Svallfors, 2002). 또한 개인의 가치와 인식이 정부와 정책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는 연구에서는 빈곤 및 불평등에 대한 인식, 개인주의·집합주의의 성향, 복지수급자에 대한 인식,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복지인식에 차이가 나타남을 밝혔다(박희봉·이희장, 2003; 이중섭 2009). Pierson(2001)은 개인의 계급적 지위보다는 복지제도와 관련된 물질적 이해관계에 따라 개인의 인식과 행동이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개인의 계급적, 경제적 지위가 복지인식에 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국내외에서의 다른 논의들과 맥락을 같이한다(Andres & Heien, 2001 ; Pettersen, 2001; 안상훈, 2000; 주은선 외 2007; 김신영, 2009. 특히 안상훈(2000)의 ‘복지지위론’은 기존 복지제도 운영을 통해 형성된 복지수급자, 복지납세자, 복지서비스제공자로서의 이해관계 사이의 복지동맹 형성과 갈등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1. 자기이해관계(self-interest) 요인: ‘복지지위’

자기이해관계론은 복지에 대한 지지적 태도의 일차적인 동기로 자기이해관계(self-interest)를 꼽는다(Geliseen, 2000). 이 논의는 정책지지에 있어서의 정치적 선택은 시장에서의 선택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물질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는 가정에 근거한다(Sears & Citrin, 1982)¹⁾. 즉 합리적 개인은 자신의 수요(demand)에 근거하여 현재 혹은 미래에 개인적인 이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큰 정책을 선호하고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Pettersen, 2001; Lipsmeyer & Nordstrom, 2003). 자기이해와 관련된 복지인식 연구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분석틀로 정리한 것이 세 가지 차원의 ‘복지지위론’이다(안상훈, 2000; 안상훈, 2003; 안상훈, 2009; 안상훈·정해식, 2010). ‘복지지위론’에서 주목한 새로운 균열은 복지욕구를 시장에서의 사적 소득을 통해 충족할 수 있는 집단과 국가복지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집단 사이에 형성되는데, 복지에 대한 이해관계는 권리-의무의 축을 중심으로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 복지납세자로서의 지위, 복지서비스제공자로서의 지위라는 세 가지의 차원으로 구체화된다고 보았다. 복지지위론은 마샬의 시민권론에 입각한 기존의 계급 균열 중심의 복지정치 논의가 권리의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복지정치의 균열은 의무의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안상훈, 2000). 한 개인이 가진 복지 권리와 의무간의 구조적 이해관계(structural interest)는 친(親)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친(親)복지정당에 대한 지지라는 선호로 표출된다(Ahn, 2000). 이 중 복지관련 행정 및 서비스 부문에 고용된 사람들의 지위를 의미하는 복지서비스제공자의 지위는 권리-의무를 모두 가진다. 그러나 그 이해관계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지관련 공공종사자의

1) 1978년 미국 California의 재산세인하에 관한 주민발의에 대한 투표결과가 자기주택 소유(self-owned)여부와 매우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주택소유자들이 해당 발의가 자신들에게 크고, 직접적이며, 지속적인 재정적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규모가 크지 않은 한국의 복지현실을 감안하여, 안상훈의 최근 연구(안상훈·정해식, 2010)는 복지서비스제공자 지위는 생략하고 복지수급자와 복지납세자의 지위에 집중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복지권리-복지의무의 축을 중심으로 복지수급자와 복지납세자에게 부과되는 혜택과 부담에 집중해보고자 한다.

1) 복지권리(혜택)차원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면, 복지국가 프로그램 확장이나 축소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물질적 ‘이해관계’를 획득한다. 이에 가시적인 형태의 복지급여나 서비스를 받는 복지수급자는 공공복지이용경험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친(親)복지적 태도를 가질 공산이 크다.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는 개별 복지 프로그램의 보편성 정도와 질적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한 나라의 복지급여가 선별주의를 표방할수록,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 것이며, 복지급여의 질이 떨어질수록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와 관련된 이해관계 범위는 좁아질 것이다(Kangas, 1995; Shaverm, 1998; 김은지·안상훈, 2010 재인용). 따라서 복지권리를 획득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그러한 지위의 질을 고양하는 것이 친(親)복지인식을 확대하는 핵심적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 공공복지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한국의 복지지형에서, 복지욕구 및 지위를 기반으로 한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구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주은선·백정미, 2007). 여전히 빈곤계층, 여성, 노인 등 복지수요를 가진 집단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기에 공공복지이용경험을 통한 복지권리획득은 비용-수혜의 축을 중심으로 복지에 대한 잠재된 이해관계를 깨닫게 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복지인식 형성에 있어 ‘복지권리’의 역할을 강조한 실증연구들은 공공복지 수급을 통해 발생하는 물질적 편익(benefit)은 복지제도에 대해 가지는 자기이해(self-interest)를 반영함으로써 복지인식에 차이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복지제도 수혜자로서 가지는 실질적이며 구

체적인 물질적 이득을 통해 해당 제도 및 복지제도 일반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형성하기 때문이다(Orschot, 1999). 주은선 외 (2007)도 모든 계층에 있어 공공복지 수급 및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이 친(親)복지적 인식을 확대시키는 유의미한 요인임을 검증한 바 있다. 개별제도에 대한 복지권리에 주목한 연구들도 있다. 안상훈 외(2013)은 주거 소비와 관련된 자원을 스스로 민간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자와 공적 제도의 도움을 받는 자 간에는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주거복지정책수급여부가 우호적인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신자은(2009)도 외래 이용횟수, 입원횟수, 입원일수 등 의료이용현황변수를 통해 건강보험의 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수혜 정도가 높을수록 건강보험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형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연구에서 복지를 통해 얻는 제도적 권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수급 중인 국가복지프로그램이 있는지를 단순 확인하는 공공복지수급여부(안상훈, 2000 ; 안상훈 외 2013 ; Orschot, 1999; Stipak, 1979; Sims, 2001), 소득에서 공적이전이 차지하는 비율에 주목하는 공공복지수급액(김은지 · 안상훈, 2010; 노법래, 2014; 안상훈, 2009 ; 안상훈 · 정해식, 2010), 본인 또는 가구원 중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빈곤, 실업, 질병 등의 복지욕구(needs)에 직면한 정도(박미옥, 2005; 안상훈 · 정해식, 2010), 본인 또는 가구원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복지프로그램 숫자 및 이용 빈도에 주목한 공공복지이용현황(김사현, 2012; 주은선 · 백정미, 2007; 신자은, 2009)등이 그것이다.

2) 복지의무(부담)차원

복지지위 또 다른 측면은 복지 권리의 신장에 따른 재정적 의무를 배분하는 방식과 관련된다. 재정적 의무란 사회전체에서 발생하는 복지권의 비용을 의미하는데 복지확대는 필연적으로 사회구성원에게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의무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안상훈, 2000). 이에 복지납세자 개인이 지니는 경제력의 수준, 납부하는 세금 및 기여금

의 구조 및 수준은 복지인식의 균열을 파악하는데 있어 핵심적 요인이다 (김은지·안상훈, 2010; 안상훈·정해식, 2010). 복지납세자지위가 가지는 이해관계는 다음과 같다. 복지납세자로서의 지위는 주로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초하는데, 개인의 소득이나 자산으로 평가되는 부의 수준이 높을수록 납세 부담은 증가한다. 세금이나 기여금등의 납세 부담이 증가할수록 물질적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복지에 대한 지지 성향은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높은 납세 부담이 즉각적으로 반(反)복지인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들의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복지국가를 둘러싼 권리-의무 축을 중심으로 한 복지지위간의 다면적 상호작용이기 때문이다(안상훈, 2009). 앞서 언급하였듯이, 복지권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사회 전체의 세금부담에 대한 의무를 확산시킨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복지수혜범위 확대와 제도의 성숙을 통해 개인이 미래의 복지수혜자가 될 가능성을 함께 증대시키기도 한다. 이에 복지확대 상황에서 한 개인은 권리-의무 축을 중심으로 개인의 장·단기적 편익과 비용을 감안하여 복지태도를 결정한다.

실제로 복지인식 형성에 있어 ‘복지의무’의 역할을 강조한 실증연구에서 복지납세자로서의 복지비용이 배가될수록 복지지출확대 및 복지에 대한 정부책임 등의 복지인식에 부정적 태도가 확인되었다(안상훈, 2000; 안상훈, 2009; 안상훈·정해식, 2010; 김은지·안상훈, 2010;). 개별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지위에 주목한 연구들도 있었다. 백화중·우해봉(2009)은 연금지위를 지역 및 사업장 가입자, 수급자 집단으로 구분하여 연금제도를 둘러싼 권리-의무 간 이해관계를 조망한바 있다. 물론 현 수급자의 경우도 대부분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 수급자와 납세자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가정한 연구결과, 현재 시점에 복지납세자의 지위를 가지는 지역 및 사업장 가입자가 연금수급자에 비해 국민연금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자은(2009)과 이훈희 외(2011)는 건강보험인식에 대한 수급자와 납세자 간 차이를 실증적으로 비교한 바 있다.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의무를 측정하는 지표로 소득수준을 사용하였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절대적인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커지므로 공적건강보장과 관련하여 권리보다는 의무가 커질 수 있다고 보았다. 연구결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건강보험 혜택에 비해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고 인식하기에 건강보험지출기대, 건강보험 역할강화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표출하였다. 이에 개별적인 복지제도 내에서도 복지납세자가 낮은 복지지지성향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복지의무(비용)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개인과 가구의 총소득(안상훈, 2000; 안상훈, 2009; 안상훈·정해식, 2010; 신자은, 2009),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안상훈·정해식, 2010, 백화중·우해봉, 2009), 소득이 발생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근로자(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 고용주 등의 경제활동인구로의 귀속여부(이훈희 외 2011), 대표적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주택(부동산)가격 및 주택가격에서 주거관련 부채금액을 뺀 순자산자치(안상훈 외 2013) 등이 그것이다. 복지납세자로서의 지위는 주로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초하는데, 개인의 소득이나 자산으로 평가되는 부의 수준이 높을수록 납세의 부담은 증가한다.

2. 인구사회학적 요인

개인의 인구·사회·경제적 수준과 지위에 따라 개인이 복지 제도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는 연구들을 살펴보자. 여성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가족보호의 부담 등으로 인해 남성보다 복지제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으며(Svallfors, 1995), 여성의 고용증가는 주로 공공부문의 확대에 기인한다는 측면에서(Sainsbury, 1996, 안상훈, 2000) 복지친화적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복지서비스가 여성의 돌봄노동을 경감시키고 주요 복지수급층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실질적인 영향수준을 살펴보아야 한다(주은선·백정미, 2007).

연령변수는 연구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복지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Van Oorschot(2000)는 경제적, 사회적으

로 취약한 젊은세대가 복지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편익을 누리므로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연령층일수록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가 높다는 주장도 있다(Blekesaune and Quadagno, 2003). 결국 연령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관계에서의 차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나이가 젊을수록 실업위험성, 저축 부족 등으로 복지프로그램에 의존할 것이며, 퇴직노인이나 고령자 역시 연금, 의료 영역에 있어 복지 의존적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보다 긍정적인 복지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Kluegel and Miyano, 1995).

교육을 통해 획득된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도 복지태도에 변화가 발생한다(Derks, 2005). 교육은 직업지위의 획득과정에서 다른 계층보다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려는 지배계층의 노력의 산물로써,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와 기준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킨다(이훈희, 2011). 이러한 측면에서 한 사회의 교육체제는 결과적으로 기존 사회계층의 질서를 공고히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기득권을 재생산 하는데 기여한다(백정미 외, 2008). 따라서 기존 경제사회적 질서를 내재화하는 각 사회의 교육의 특성에 따라 전반적인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3. 가구구성원특성 요인

합리적 개인은 자신의 수요(demand)에 기초하여 현재 혹은 미래에 물질적 이득을 제공할 가능성이 큰 정책을 선호하고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Pettersen, 2001; Lipsmeyer & Nordstrom, 2003). 이에 가구구성원 중 복지정책의 주된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노인, 아동, 장애인, 실업자 등 특정집단이 속해있을수록 가구 내 복지에 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복지정책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경향이 더 크다. 이에 복지정책이 목적하는 주요 수혜의 내용과 대상에 따라 복지인식과 태도가 상이하게 결정된다. 노인들은 소득보장정책을 더욱 지지하는 한편, 청장년층은 아동복지정책을 더욱 선호하였고, 계층 및 세대를 초월하여 현재 이

용자(present user)과 잠재적 이용자(soom-to-be user)의 이해를 모두 반영하는 노령연금과 보건의료서비스는 모든 연령대의 인구집단에서 상당한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ettersen, 2001; Goul andersen, 2002). 한국의 취약한 복지구조에서는 욕구가 수혜로 자동적으로 연결되지 않기에(김은지·안상훈, 2010), 복지인식을 설명하는 영향요인 중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잠재적 수혜가능성이 높은 가구 구성원의 존재여부를 통제하여야 현재적 복지권리(편익)를 누리는 집단의 이해관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정치성향 및 가치관 요인

가치에 기반을 둔 복지인식연구는 개인이 유지해온 신념이나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가치관의 영향력에 주목한다. 개인의 태도나 의식은 개인이 일관되게 유지해온 이념적 성향이나 중심적 가치관에 의해 형성, 전개된다는 가정 하에, 이들 연구는 개인의 정치적 의식 형성의 근거를 정치성향, 정당소속감, 분배에 대한 규범적 태도, 복지체제의 역할 및 복지대상자에 대한 가치판단 등에서 찾고 있다(이아름, 2010; 이준섭, 2009; Craig & Gainous & Martinez, 2006; Rudolph & Evans, 2005; Blekesaune & Quadagno, 2003)

복지인식은 복지대상자 및 복지체제의 역할에 대한 가치판단에 따라 서로 달라진다. 복지대상자 및 복지국가 역할에 대한 가치판단은 물질적·비물질적 상품이 사회구성원들에게 분배되어야 하는 방식과 연결된다. 분배 방식과 관련된 가치관은 Kluegel & Mateju(1995)에 의해 집합주의와 개인주의로 대별된다. 공동체주의에 근거하여 평등한 분배정의를 지향할수록 정부의 복지책임을 강조하는 반면(Craig & Gainous & Martinez, 2006), 시장에서의 노동을 통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개인주의를 지향할수록 비우호적 복지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주의에서 보이는 비우호적 복지인식은 수혜대상자의 의존성과 도

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있으며, 복지혜택이 경제적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게 작동한다고 본다. Blekesaune & Quadagno (2003)의 연구에서도 개인책임을 강조하는 경제적 개인주의는 복지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연결되었다. 개인의 복지는 개인의 노동시장에서의 노력의 결과로 얻어져야 한다고 믿는 경제적 개인주의는 일부 시민들의 경제적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복지국가가 수혜자들의 의존적인 성향을 강화함으로써 시장원칙을 파괴한다고 인식한다. 이와 유사하게 우파적 이념, 즉 보수적 정치성향을 가질수록 정부의 복지책임을 반대하는 경향도 일관되게 확인되었다(Rudolph & Evans, 2005). 보수적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재분배 정책은 그들의 이념적 믿음에 대한 훼손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집합주의와 개인주의로 대별되는 분배정의에 대한 가치와 신념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보수-진보 간 스펙트럼에서 발견되는 정치성향, 분배정책의 강화에 대한 동의 정도, 복지의 확대가 노동윤리를 훼손하는지에 대한 인식, 복지수혜자의 성향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에 주목해보기로 한다.

제 3절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물질적 희생과 정부신뢰 간의 상호작용

: ‘물질적 희생이론(material sacrifice theory)’ 을 중심으로

1. 물질적 희생과 정부신뢰 간의 상호작용

재분배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정부신뢰가 더욱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Hetherington(2005)의 ‘물질적 희생이론(material sacrifice theory)’은 정부신뢰와 정책지지의 관계에서 있어서 정책유형에 따라 ‘인지된 물질적 희생(perceived material sacrifice)’에 차이가 있음을 강조한다. ‘인지된 물질적 희생’은 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물질적 비용(세금)과 물질적 편익(급여 및 서비스)의 차이로, 각 개인이 가지는 해당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물질적 비용이 물질적 편익보다 큰 상황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Hetherington(2005)은 정책유형에 따라 비용과 편익의 귀착범위 정도가 달라지는데, 이 때 일정부분 편익보다 비용이 큰 상황에서도 ‘물질적 희생’을 부담하고자 하는 성향은 개인이 가진 정부의 신뢰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Wilson(1995)은 철도, 전기 등 공공재의 공급으로 대표되는 배분정책은 비용과 편익이 넓게 분산되기에 이를 위한 정부서비스의 증가는 넓은 수혜집단에게 비용과 혜택을 배분한다고 보았다. 반면, 재분배정책의 경우 비용은 모든 시민에게 넓게 분산되는 반면 편익은 특정 계층에게 좁게 집중되는 경향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를 ‘물질적 희생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상대적으로 편익이 좁게 집중되는 재분배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부담하는 다수가 비대칭적인 ‘물질적 희생(material sacrifice)’을 감수해야하며, 이러한 희생을 가능케 하는 역할을 정부신뢰 수준이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물질적 희생이론(material sacrifice theory)’을 바탕으로 한 실증연구결과에서도 범죄예방, 환경보호, 국방정책과 같이 편익이 넓게 배

분되는 정책의 지출 증가에 있어서 정부신뢰수준에 따른 정책지지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복지정책, 푸드스탬프(food stamp), 아동보호정책, 보건의료정책, 외국원조정책, 빈민구제정책과 같이 비용에 비해 편익이 좁게 배분되는 재분배정책 지지에 관련해서는 정부신뢰수준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강하게 나타남이 확인되었다(Hetherington, 2005; Rudolph & Evans, 2005; Hetherington & Rudolph, 2011). 그 중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한 보육 및 양육료 지원에 대한 지지와 관련하여 잠재적인 수혜 가능성이 없는 집단(가구 내 18세 이하 아동이 없고 빈곤선 이상 소득을 가진 가구)은 비대칭적인 ‘물질적 희생’을 초래하는 해당정책에 기본적으로 비우호적 인식을 가졌다. 그러나 ‘물질적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집단 중 상대적으로 정부신뢰가 높은 경우 해당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다소 완화되었다. 반면, 잠재적 수혜가능성으로 인해 물질적 편익을 향유하는 집단의 경우, 정부신뢰 수준은 해당정책 지지수준에 큰 영향을 행사하지 않았다(Hetherington, 2005). 요컨대, 현재적인 복지 편익(benefit)이나 잠재적 수혜가능성이 동반되지 않은 일방적인 복지비용의 증가는 복지납세자의 ‘물질적 희생’ 수준을 높인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복지확충 및 비용부담의사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물질적 희생’을 경험하는 집단 중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신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자신의 물질적 이해를 다소 거스르는 방향의 정책인식을 보여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신뢰와 권리-의무 간 복지지위와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동태적 관계는 복지 지지 및 반대 성향을 조절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복지증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물질적 부담(세금 및 사회보험료 지출)이 물질적 혜택(급여 및 서비스)에 비해 큰 상황에서도 ‘물질적 희생’을 감수하게 하는 정부신뢰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2. 정부신뢰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

‘물질적 희생’을 감수하는 친(親)복지태도의 원천으로 정부신뢰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로 한다. 복지인식은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제도에 대한 가치, 태도, 행동지향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와 태도는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과 복지실천의지로 표출되며, 복지인식은 이들 간의 관계의 총합을 말한다(최균·류진석, 2000). 특히 특정 정책에 대한 인식 및 판단은 ‘사실’의 문제보다는 ‘해석’의 문제에 가깝다(Fischer, 1998). 정책결정과정 역시 단순히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효율적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기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가치 및 이해관계에 대한 정치적 조율과정을 의미한다. 이에 복지인식 역시 개인의 가치, 태도, 행동지향 등을 반영한 ‘정신적 작용과정’(mind change process)이라 할 수 있으며(Eran, 2006) 복지인식 결정에 있어 정부나 정치체제에 대한 추상적인 ‘해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나 정치체제에 기능에 대한 ‘해석’인 정부신뢰(trust in government)란 정부가 믿을만하다는 것(trustworthiness)을 의미한다. ‘믿을 만 하다는 것’은 제도 및 계약적 형식의 테두리 내에서 만들어지는 도덕적 공감대이며, 믿을만하다는 인식이 축적되어 점차 자발적인 신뢰(trust)가 형성된다(Rucio, 1999). 그렇다면 정부에 대한 축적된 신뢰는 정책에 대한 선호 또는 지지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가?

Nahayoshi & Sato(2014)는 정부에 대한 제도적 신뢰가 재분배정책에 대한 선호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Kroneberg(2006)의 ‘프레임 선택모형(Model of frame selection)’을 활용하였다. 이 모형에서 의사결정은 ‘상황에 대한 인식’(definition of the situation: frame selection),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의 구성’(a set of appropriate actions: script selection), ‘행동의 실행’(action selection)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 모형에 의

하면 각 개인은 상황과, 상황에 대한 인식, 즉 특정 상황을 바라보는 구조(frame)가 일치한다고 판단 시,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 구성(script selection)에 따라 자발적 또는 자동적으로 특정 행동을 선택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판단 시,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안적인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 이를 정부신뢰와 정책지지와의 관계에 대입시켜보면, 재분배정책의 정당성을 인식하고 내면화할수록 복지제도로부터 직접적 수혜를 받지 못한다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선택·표명하게 되는 것이다(Nahayoshi & Sato, 2014). 요컨대, 정부신뢰는 시민이 정부에 대한 가지는 주관적 ‘해석’의 결과물인데,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시민은 정부신뢰라는 잣대를 통해 정책의 결과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다(Kim, 2005).

한편, 정부신뢰를 ‘시민의 기대와 정부성으로 구성되는 함수’로 정의하는 기존 연구들은(Van de Walle & Bouckaert, 2003; Hinnant & Moon, 2004; Putnam, Pharr & Dalton, 2000; Kim, 2005; Sims, 2001; 박정훈, 신정희, 2010) 시민들이 정부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자발적으로 내면화하고 정부에 대한 제도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기대와 실제 정부성과 간의 정합성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즉, 정부신뢰란 ‘시민이 느끼기에 자신의 선호에 대하여 정부가 얼마나 반응하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민의 선호와 실제 정부기능 간의 정합성 정도에 따라 정부신뢰의 수준과 깊이가 결정된다(Van de Walle & Bouckaert, 2003; Hinnant & Moon, 2004). 즉, 정부신뢰는 시민이 정부에 대해 가지는 기대와 정부 성과 간 차이 정도에 의해서 그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다(Putnam, Pharr & Dalton, 2000). 이 때, 정부성과는 단순히 서비스 전달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포함한다. 서로 다른 이해를 조정하고, 대중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비용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간 균형을 맞추어야하기 때문이다. 정책집행과정에서 정부의 정책능력, 윤리성 등이 시민들이 정부에 대해 가지는 신뢰수준을 결정한다(Sims, 2001).

정부성과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정부신뢰는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선택하고 순조로운 정책집행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동의와 순응을 이끌어 내어 정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이다(Newton, 2001). 정부신뢰가 높다는 것은 체제 전반의 정부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시민으로부터 자발적인 권위와 지지를 부여받기 때문이다. 정부가 특정 정책에 대한 의지 및 지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신뢰를 잃은 상태라면 정책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기가 어려우며 정책의 성공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정부신뢰 구축은 정책 집행의 전 과정에 힘을 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Chanley, 2000; Newton, 2001). 특히 정책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높은 정부신뢰는 통치기구에 대한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게 하며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가능하게 한다(Sears and Citrin, 1982; 박정훈, 2008; 이양수, 2008).

정부의 정책능력 중 복지 분야와 정부신뢰와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 중 Steinmo(1994)는 미국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고, 복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반대하는 이유를 정치적 결정기구의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였으며, 아울러 정부의 신뢰구축과 복지정책 추진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바 있다. 분석결과, 미국정치체제의 권력과 권위의 파편화가 정부신뢰하락을 초래하는 주요인임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 복지정책기구의 효율성 인식 및 정책태도에 부정적 인식이 사회전반에 확대되었다고 주장하였다. Rose(1991) 역시 국가가 시민들을 효율적으로 살핀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만 관료의 손에 복지를 맡기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Hetherington(2005)의 연구에서도 빈곤완화, 인종차별철폐와 같은 진보적 성격의 정책 목적을 지지하지만, 정작 해당 정책의 확대는 반대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 Hetherington(2005)은 해당 정책을 전달하는 현 행정부에 대한 신뢰, 즉 정책기구에 대한 효율성 인식이 하락하는 것을 그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Svallfors (2002) 연구에서는 정부를 신뢰하는 시민들은 세금징수에 불만을 덜 가지고 국가가 세금을 낭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덜 비관적이기에, 정부신뢰는 국가

의 역할크기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함을 확인하였다. 정부신뢰와 유사한 정부의 질(quality of government)에 주목한 이현우(2013)의 연구에서는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복지에산확대 동의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지적되었다.

위의 연구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정부에 대한 기능적 신뢰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공공정책 산출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평가는 정부가 정책을 통해 추구하는 목적자체에 대한 인정 뿐 아니라 특정문제를 해결할 정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게 한다.²⁾ 행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신뢰는 체제 전반에 대한 신뢰로 이어져 정부로 하여금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체제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신뢰를 형성한다(Hetherington, 1998). 앞서 복지정책은 기여자와 수혜자가 명확하게 구분됨으로써 세금을 납부하는 기여자와 이들의 세금으로부터 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간 상당한 정치적 긴장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였다(Wilensky, 1976). 이에 효율적으로 정책결정을 수행할 것이라는 정부역할에 대한 능력과 선의에 대한 신뢰는 ‘자기피해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 하게 할 것이다(Mayer et al., 1995). 따라서 행정부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신뢰는 복지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 편익과 비용에 매우 민감한 수혜자와 기여자 간 ‘정치적 긴장’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금현섭·백승주, 2010).

본 연구는 정부신뢰가 정부의 복지책임 및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를 수용하는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복지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서 파생되는 각 개인의 물질적 희생(material sacrifice)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조절변수로서 정부신뢰의 영향력에 주목하기로 한다.

2) Hetherington(2005)은 정부역할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특정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잘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When the government in Washington to solve _____ problem, how much confidence do you have the problem actually will be solved?) 라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3. 물질적 희생의 개념 및 측정

‘물질적 희생(material sacrifice)’의 개념은 여러 정책 대안 가운데 목표 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각 대안이 초래할 비용과 편익을 비교·분석하는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어떤 프로젝트와 관련된 편익과 비용들을 모두 금전적 가치(화폐가치)로 환산한 다음, 편익 및 비용의 크기를 비교·평가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 파악되는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남기민 외 2013). 그 중 순편익(Net Benefit) 기법은 총편익과 총비용의 규모를 단순 비교, 산출된 차이를 ‘0’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어떤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순편익이 0보다 크고, 다른 대안적인 공공투자 또는 민간투자에서 발생하는 순편익 보다 클 경우 해당정책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리는 방법이 바로 비용-편익 분석이다(김홍배, 2000).

공공정책을 비용-편익분석으로 평가하거나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비용과 편익을 화폐적 단위로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의 비용과 편익의 경우 비화폐적(non-monetary), 비가시적(intangible), 간접적(indirect), 장기적(long-term)인 것들이 많아 금전적인 비용과 편익을 정확히 계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김태성·성경륜, 2009). 그럼에도 각 국가들은 특정 복지제도를 둘러싸고 인식하는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의 비교·평가를 위해 비용-편익분석 방법을 사용하며, 이를 통해 세부 프로그램의 도입 및 지출수준을 결정한다.

이상은 외(2010)은 자활사업 참여자와 자활사업 비참여자(정부 및 납세자)의 입장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였다. 자활사업 참여자 1인당 비용 및 참여자 유형 및 인원수, 매출액 및 사업비, 인건비 등을 토대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사회 전체적 차원의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호태(2012)도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위하여 비참여자(정부 또는 납세자), 참여자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고려한 사회전체의 순편익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노인 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비용-편익분석에서 주목할 점은 회계적 관점에서 동일한 항목(예를 들면 인건비)이 비참여자에게는 비용, 참여자에게는 편익으로 계산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비참여자 입장에서의 편익은 자활 혹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한 매출액, 지자체를 통해 제공되는 기초보장 현금급여의 감소분 등이 있으며, 인건비, 사업비, 행정비용 등은 비용으로 간주된다. 반면 참여자입장에서의 편익은 자활사업을 통해 얻는 인건비이지만, 기존 수급자 지위를 가진 참여자는 기초급여 감소분이라는 비용이 발생한다. 즉, 사회전체의 순편익(net benefit)은 해당정책의 참여자와 비참여자 입장의 순편익의 총합으로 계산되는데, 이는 동일한 정책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에게 비대칭적인 비용과 편익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국가차원의 정책결정 뿐 아니라 각 개인의 정치적 선택 역시 자신의 물질적 이득을 증진할 수 있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Sears & Citrin, 1982). 즉 합리적 개인은 자신의 필요에 기반 하여 현재 혹은 미래에 개인적인 편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큰 정책을 선호하고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복지정치맥락에서 한 개인은 복지도급자, 납세자로서의 지위도 아울러 점하고 있기에 복지도급자는 권리와 의무의 다면적 상호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안상훈, 2000). 복지인식 형성에 있어 ‘복지권리’와 ‘복지의무’의 역할을 강조한 기존의 실증연구들은 공공복지 수급을 통해 발생하는 물질적 혜택과 납세자로서 부과되는 부담 변수를 각각 투입함으로써 한 개인이 점하는 복지도급자, 복지납세자로서의 지위의 개별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앞서 비용-편익분석의 원리에서 언급하였듯이, 동일한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에게는 비대칭적인 비용과 편익이 발생한다. 즉, 특정 복지정책의 확대가 비용으로 인식되는 집단과 편익으로 인식되는 집단 간 인식의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주로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초하는 복지도급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개인의 소득이나 자산으로 평가되는 부의 수준이 높을수록 복지확대로 인한 납세 부담의 증가는 필

연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복제제도를 통해 얻는 혜택이 동반되면, 물질적 이해관계에 따른 개인의 복지인식 및 정치적 선택은 다소 상이하게 표출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개인을 복지제도를 둘러싼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합리적 행위자로 상정하고, 합리적 행위자로서 가지는 복지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한 개인이 동시에 점하고 있는 다면적인 복지지위 지위를 단일차원으로 통합하여 측정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 개인이 아울러 점하는 복지지위를 측정하기 위해 조사 대상자가 속한 가구단위에서 발생하는 물질적 혜택과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물질적 희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물질적 희생’은 복지제도를 둘러싼 개인적 비용(individual cost)과 개인적 편익(individual benefit)간의 비교·평가로 측정이 가능하다. 개인적 비용은 개인들이 부담하는 조세나 보험료 등이고 개인적 편익은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급여액으로 측정이 가능하다(김태성·성경륜, 2009). 각 개인 역시 복지제도를 둘러싼 개인적 편익과 비용을 비교·평가하며, 정책 영역과 대상에 있어 자신의 물질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에 대한 지지와 반대 입장을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복지지위와 관련하여 순수한 의미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비용과 편익은 존재하기 어렵다. OECD 국가에서 빈곤율 또는 소득분배 등의 측정단위로 동일한 거주지에서 함께 거주하며 기본적인 생활을 공동으로 꾸려나가는 단위인 ‘가구’(household)를 주로 사용하며(박찬용, 2002), 복지제도에서 복지수요에 근거하여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 단위 역시 주로 가구이다(김태성, 2007). 기존 복지수급자 및 납세자로서의 지위를 측정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가구 사회보장급여, 가구 공공서비스 이용경험 횟수, 가구소득대체율(가구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공적이전소득의 비중) 등의 변수를 사용하여 가구구성원으로서 가지는 복지지위를 주로 반영하였다(김은지·안상훈, 2010; 주은선·백정미, 2007).

‘물질적 희생(material sacrifice)’의 개념을 활용한 기존 연구들에서도(Hetherington, 2005; Rudolph & Evans, 2005; Hetherington

& Rudolph; 2011; Nagayoshi & Sato, 2014) 가구단위의 복지혜택 및 부담을 반영하였다. Hetherington(2005)의 연구에서는 가구의 소득 수준, 주 경제활동자의 노동시장 지위나 복지욕구가 있는 가구원의 동거 여부를 파악하여 해당정책의 잠재적 수급가능성의 갖춘 가구를 물질적 편익이 발생하는 집단, 잠재적 수급가능성을 갖추지 못한 가구를 물질적 희생이 발생하는 집단으로 각각 정의한 후, 응답자들에게 ‘물질적 희생’을 발생하게 하는 정책의 지지여부를 물었다. Hetherington & Rudolph(2011)의 연구에서는 특정 재분배 정책의 도입(예를 들면 Obama’ s health care reform)이 응답자 및 응답자 가구의 전반적인 건강보장상황(health care situation)을 개선하는가, 악화시키는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해당정책이 가져올 응답자 및 응답자 가구의 물질적 편익 혹은 희생의 발생가능성에 따른 정책 인식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조사대상자가 속한 가구단위의 복지부담- 혜택 간 격차에 주목하기로 한다.

한편, ‘물질적 희생’ 개념을 활용한 위의 연구들은 주로 빈곤, 실업, 질병, 돌봄 등의 복지욕구에 직면한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를 구분하여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가능성에 따라 ‘물질적 희생’의 잠재적인 발생여부에 주목하였다. Hetherington(2005)의 연구에서는 미취학·학령기 아동이 있는가(child care, public school), 민간건강보험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medicaid, health care), 학령기 아동이 있으면서 빈곤한가(aid to mother) 등의 사회경제학적 지위에 관련한 요인들을 물어 제도에 따른 잠재적인 ‘물질적 희생’ 발생 여부 및 수준을 측정하였다. Nagayoshi & Sato(2014)의 연구에서도 연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주목하여 잠재적으로 물질적 희생을 부담할 집단과 편익을 누리게 될 집단을 구분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외부자’(outsiders)의 지위를 가진 이들과 ‘내부자(insiders)’의 지위를 가진 대상을 분류하고, 저임금, 고용불안정성으로 인해 빈곤, 실업 등의 복지수요 및 잠재적 복지수혜가능성이 높은 ‘외부자(outsiders)’ 집단의 복지인식을 살펴본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제도별로 수급계층이 굉장히 상이하며, 수급지위가 항상 동일한 상태로만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복지제도 밖에서 복지납세자로서의 의무만을 지고 있으며, 복지프로그램의 성숙도 또한 낮아 복지권리를 누리는 수급자로서의 확고한 이해관계를 가지기 어렵다. 또한 빈곤층에 속하는지의 여부가 반드시 공공부조 수급여부를 담보하지 못하며, 특정 인구사회학적 요인이나 복지욕구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특정 수당이나 서비스 수혜로 연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복지를 둘러싼 권리-의무 간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구축되지 않은 한국 복지현실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개별 사회보장제도에서 ‘잠재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적 희생의 발생 가능성보다는 복지제도 일반의 부담-혜택 간 격차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물질적 희생에 주목하기로 한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Hetherington(2005)의 ‘물질적 희생이론(material sacrifice theory)’ 입각하여 조사대상자가 속한 가구단위의 복지부담과 복지혜택 간의 차이에 주목하되, 기존 연구와 달리 복지 프로그램 수급 가능성에 따른 잠재적인 ‘물질적 희생’이 아닌 현재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적 희생’ 수준에 주목한다. 이러한 시도는 특정 인구사회학적 요인이나 사회경제적지위에 따른 복지욕구의 존재가 반드시 특정 수당이나 서비스 수혜로 연결되지 않는 한국의 복지현실에서, 복지수혜자 혹은 부담자로서 가지는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물질적 이해관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복지제도일반에서 조사대상자가 속한 가구단위의 물질적 부담(조세 및 사회보험료 지출)이 물질적 혜택(사회보험, 공공부조 급여 및 각종 정부보조금)보다 큰 경우 ‘물질적 희생’이 발생한다고 정의한다.

4. 정부신뢰의 개념 및 측정

‘물질적 희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적 긴장’ 완화에 기여하는 정부신뢰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원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정부신뢰에 대한 구성변수(constructs)는 통일된 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들기에 측정하는 변수를 설정함에 있어 연구의 목적과 개념에 맞도록 측정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필요하다(이양수, 2008). 개념의 구성과 이해에 대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신뢰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포괄적인 ‘정치적 태도’라는 점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이다(배정현, 2013).

신뢰에 대한 초기논의는 위협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타인의 행동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해를 끼칠지 또는 도움을 줄지에 대한 판단에 기초한 사회적 관계로 한정되었다(Boss, 1978; Coleman, 1994; Hardin, 1999). Boss(1978)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중요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상황에서 그를 감독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계없이 자신의 취약성을 받아들여려는 의지’로 대인간의 신뢰를 정의한 바 있다. 신뢰에 대한 이와 같은 개념화는 사적 영역 뿐 아니라 공적 및 정치적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여, 자신이 손실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영역에 대한 믿음을 부여하는 제도적 관계로 점차 확장되었다(박병진, 2007; 박통희, 1999). 관계성 속에서 신뢰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방식의 일환으로 정부신뢰는 시민과 정부 구성원 개개인 간에 형성되는 인적 신뢰가 아닌 정부라는 기관에 대해 시민들이 가지는 제도적 신뢰라고 정의할 수 있다(Newton, 2001; Rucio, 1999).

이와 관련해 Mayer et al(1995)는 ‘정부를 감시,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상관없이 국민이 정부로 인해 피해를 볼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며 정부를 지지하는 심리적 태도’로 정부신뢰를 정의하였다. 즉, 정부신뢰는 정부가 자신에게 중요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기대되지만, 그것을 감독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기피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능력과 선의에 대해 가지는 믿음과

순응이라는 요소로 이루어진다. 위의 정부신뢰 개념을 활용한 손호중·채원호(2005)의 연구에서는 ‘피해감수 의지’, ‘정부에 대한 믿음’ ‘정책순응’의 3개 변수로 정부신뢰 개념을 조작화한바 있다.

정부신뢰의 개념을 구성하는 핵심 요인은 무엇일까? 시민들은 정부의 성과나 국정운영에 대한 정보를 통해 정치행위자나 정부가 신뢰할만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며, 정부가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국정운영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올바르게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유지한다(Chanley et al, 2001). 시민과 정부 간 발생하는 신뢰의 속성에 주목한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기술적으로 유능한 정부 역할수행에 대한 기대’(trust in the ability of the object to perform effectively)인 기능적 신뢰와 ‘수탁(fiduciary)’ 의무의 도덕적 이행 태도(의도)에 대한 기대’(trust in the intentions of an object)인 윤리적 신뢰를 정부신뢰의 주요 구성요소로 다루었다(Barber, 1983). ‘기능적 신뢰’는 정부가 산출하는 각종 산출물에 대한 평가로써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잘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 정향(Hetherington, 1998), 집권부의 공공정책 산출에 대한 평가와 성과에 대한 일반적인 승인-불승인의 변수(Muller & Jukam, 1977), 국민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여 공익에 따라 공공정책을 결정, 집행하고 정부를 잘 운용한다는 믿음이나 긍정적인 태도(손호중·채원호, 2005)등으로 ‘필요한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정부역량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및 평가’로 정의된다. 이양수(2008)는 현 정부가 다음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공 혹은 실패하고 있는나라는 질문을 통해 ‘기능적 신뢰’와 유사한 개념으로 ‘정부역할신뢰’라는 개념을 사용한 바 있다. ‘정부역할신뢰’는 정책이 집행되고 있거나, 집행된 결과에 대한 평가로 정책이 시행되어 의도된 효과를 나타내고 있거나,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윤리적 신뢰’는 본인-대리인(principal-agent)관계에 기초한 시민-정부 간 ‘신탁적 신뢰(fiduciary trust)’를 의미한다(Thomas, 1998). Sheppard & Sherman(1998)은 신뢰의 수준(depth)와 상호성의 형태(form of interdependence)를 기준으로 네 가지 신뢰상황을 상

정하고 있는바, 얇은 일방적 의존(shallow dependence), 깊은 일방적 의존(deep dependence) 그리고 얇은 상호의존(shallow interdependence), 그리고 깊은 상호의존(deep interdependence)이 그것이다. 정부와 시민간의 권력적 불평등 관계를 상징하는 ‘신탁적 신뢰’(fiduciary trust)는 ‘깊은 일방적 의존(deep dependence)’ 형태를 지닌다. 본인(principal)인 국민은 대리인(agent)인 정부의 업무 수행을 감시 또는 통제하는데 본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정부 또한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하여 기회주의적 행동을 함으로써 국민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본인-대리인 간 ‘일방적 의존’ 형태의 신뢰는 정부가 국민의 이익에 입각하여 수탁(fiduciary) 책임을 도덕적이고 성실하게 이행할 때 극대화될 수 있다. 즉, 정부관료 혹은 정치가들이 개인의 이익보다 시민들의 이익 혹은 공익을 우선할 것이라는 기대는 정부 통치 기반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정부신뢰를 증진시키는 핵심적 요소가 된다(Hibbing et al, 1995).

정부신뢰 개념이 가진 다양성은 그 측정에 있어서도 다양한 접근들을 가능하게 하였다. 정부신뢰를 정부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묻는 단일 문항적 차원으로 측정하거나(박홍식 · 오경민, 2002; Eran, 2006; Sims, 2001), 신뢰의 대상을 구분하여 외부신뢰와 내부신뢰로 분리하여 측정하거나(김현구 외, 2009), 기관신뢰(중앙정부, 지방정부, 의회, 정당, 사법부 등)와 대인신뢰(대통령, 고위관료, 시장군수, 경찰 등)를 분리 혹은 합산하여 사용하거나(Nye et al. 1997; 금현섭 · 백승주, 2010; 이양수, 2008), 전문성, 능률성, 공정성, 투명성 등과 같은 다양한 정부신뢰의 개념적 측정요소들을 이용하여 통합적인 신뢰정도를 측정하거나(박순애, 2006; 손호중 외, 2005; 오경민 외, 2002), 정부신뢰의 구성개념을 정부성과 및 정부활동에 대한 과정적 평가로 나누어 측정(Butler, 1991; 박종민 · 배정현, 2011)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던 ‘기능적 신뢰’의 측정요소로는 전문성, 대응성, 능률성, 효과성, 유용성 등이 활용되었으며, 해당 업무분야에 대한 이해와 업무처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보유여부, 재원투입대비 목표달성도, 절차의 효율성 등이 구체적 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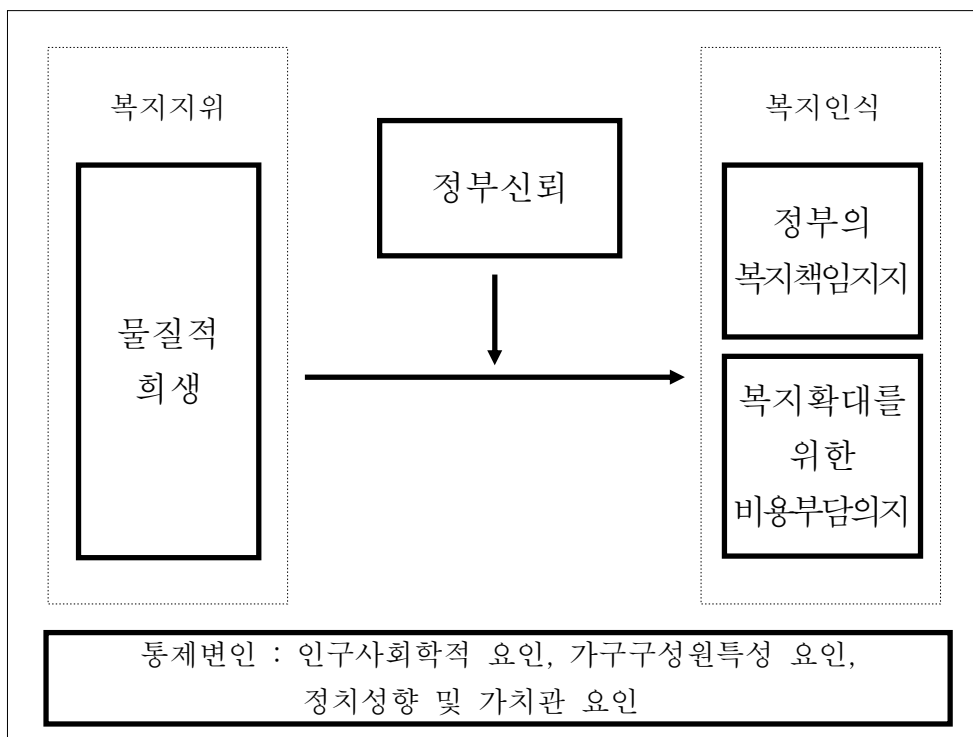
정지표로 사용되었다(박순애, 2006; 손호중 외, 2005; 오경민 외, 2002). ‘윤리적 신뢰’의 측정요소로는 도덕성, 정직성, 청렴성, 투명성, 공정성 등이 활용되었으며, 정부의 반부패노력도, 정부활동내용(정보)에 대한 흐름의 투명도,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편익이 합의된 일반원칙에 의거하여 편법이나 차별 없이 분배되는 정도 등이 구체적인 측정지표로 사용된바 있다(Butler, 1991; 박순애, 2006; 박종민·배정현, 2011 손호중 외, 2005; 오경민 외, 2002).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의 다양한 측정개념 중 정부가 산출하는 각종 산출물에 대한 평가나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잘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 정향(Hetherington, 1998)인 ‘기능적 신뢰’를 기본으로 하되, 여러 정책기능 중 사회정책기능에 대한 평가에 집중하여 ‘정부의 사회정책의 산출물에 대한 국민의 주관적인 평가’를 그 구성개념으로 측정한다. 이는 형식적 차원의 국정 전반에 대한 평가보다는 정부가 산출한 사회정책에 대한 내용적,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각종 정부정책에 영향을 받는 국민은 다양한 기준에 의해 정책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관적 정책평가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국민들이 느끼는 정책에 대한 만족 혹은 불만족으로 표출된다. 각각의 정책내용이 갖추어야 할 규범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민들은 정부성과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게 되며, 이는 정부의 공공정책 산출에 대한 승인-불승인으로 이어진다.(Muller & Zucam, 1977). 이에 기능적 신뢰 혹은 정부역할신뢰는 정책일반에 대한 국민의 정서를 대변하며, 공공행정체계에 대한 정확한 지표(thermometer)로 기능한다(Newton and Norris, 2000). 이에 본 연구는 ‘기술적으로 유능한 정부 역할수행에 대한 기대’인 기능적 신뢰 개념에 주목하고(Barber 1983), 정부의 복지기능에 대한 신뢰가 복지정책의 집행과정에서의 동의와 순응을 이끌어내고, 복지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가능하게 하는지 경험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제 3장 연구방법

제 1절 연구모형설정

본 연구는 ‘복지지위론’ 과 ‘물질적 희생이론’ 에 입각하여 각 개인의 복지지위의 부담-혜택 간 격차인 물질적 희생이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복지인식을 ‘정부의 복지책임지지’ 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 로 나누어 분석모형을 구성하며, 물질적 희생이 커질수록 복지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정부신뢰가 복지인식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해당 복지지위에서 발생하는 물질적 희생이 복지인식에 가지는 영향이 정부신뢰 수준에 따라 조절되어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제 2절 연구가설 도출

복지지위가 복지인식을 결정하는 경로는 단순히 비용-편익 배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포함한다. 정책집행과정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대중들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비용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간의 균형과정 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Sims, 2001). 이에 복지제도를 둘러싼 개인의 권리와 의무는 복지제도에 대해 가지는 물질적 이해관계를 반영함으로써 복지인식에 차이를 초래할 것이다. 복지급여를 통한 혜택을 경험한 복지수급자집단은 친(親)복지인식을 가지는 반면, 복지재정충당을 위한 부담의 수준이 높은 복지납세자집단은 반(反)복지인식을 형성한다(안상훈, 2000). 따라서 복지지위에서 발생하는 물질적 부담(세금)이 혜택(급여)보다 커지는 ‘물질적 희생’이 증가할수록 비우호적인 복지인식을 가질 것이다.

연구문제1. 복지지위가 복지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가설1-1. 복지지위 상의 물질적 희생이 커질수록 정부의 복지책임지지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가설1-2. 복지지위 상의 물질적 희생이 커질수록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공정책 산출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평가는 정부가 정책을 통해 추구하는 목적 자체에 대한 인정 뿐 아니라 특정문제를 해결할 정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게 한다. 행정부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신뢰는 체제 전반에 대한 신뢰로 이어져 정부로 하여금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을 집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체제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신뢰를 형성한다(Hetherington, 1998). 이에 효율적으로 정책결정을 수행할 것이라는 정부역할에 대한 신뢰는 통치기구 역할에 대한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게 하며 복지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동의와 순응을 이끌어낼

것이라 기대된다.

연구문제2. 정부신뢰가 복지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가설2-1. 정부신뢰가 높아질수록 정부의 복지책임지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가설2-2. 정부신뢰가 높아질수록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 부담의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질적 희생이론(material sacrifice theory)’은 재분배정책유형에 따라 한 개인이 가지는 비용과 편익의 귀착범위가 달라지는데 일정부 분 편익이 비용보다 큰 상황에서도 ‘물질적 희생’을 감수하고자 하는 성향은 각 개인이 가진 정부신뢰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복지지위론’에 ‘물질적 희생이론’을 대입하면, 복지확대는 복지납 세자의 물질적 희생의 가능성을 높여, 기본적으로 반(反)복지인식을 가지게 할 것이다. 하지만 물질적 희생을 경험하는 집단 중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신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자신의 물질적 이해를 다소 거스르는 방향의 정책인식을 보여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신뢰와 복지혜택-부담 간 복지지위와의 동태적 관계에 따라 복지인식의 경향성이 달라질 공산이 크다.

연구문제3. 복지지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정부신뢰 수준에 의해 조절되는가?

=> 연구가설 3-1. 정부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복지지위 상의 물질적 희생이 정부의 복지책임지지에 미치는 부(-)적 영향의 크기가 완화될 것이다.

=> 연구가설 3-2. 정부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복지지위 상의 물질적 희생이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미치는 부(-)적 영향의 크기가 완화될 것이다.

제 3절 자료와 측정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2013년 공동으로 수행한 「한국복지패널의 8차년도」 조사이다. 「한국복지패널의 8차년도」 조사에는 가구원과 가구용 설문 외에 부가적으로 복지인식에 대한 부가조사가 수행되어 전 국민을 표본으로 하는 복지인식 자료를 제공한다. 이 조사는 전국(제주도포함)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다단계 층화 무작위추출법으로 7,627 가구를 추출하였으며, 이 중 응답을 완료한 가구는 7,312가구이다. 아울러 7차년도 전체 표본 가구 중 확률비례추출법에 따라 추출한 2399가구(가구원 5,050명)의 만 19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복지인식 부가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가운데 2,209가구의 4,185명의 가구원이 조사를 완료하였다. 한편, 이 조사는 표본 추출 시 중위소득 60%미만 저소득층에서 전체 표본의 약 50%를 할당하였으므로, 표본단위의 대표성을 조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인 횡단면 표준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복지인식 부가조사」에 응답을 완료한 4,185명 중 가중치를 적용한 4,124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조사는 연령, 소득계층, 경제활동상태 등에 따른 다양한 인구집단별로 생활실태와 복지제도 수급현황 및 복지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향후 사회복지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복지인식 부가조사」는 복지와 소득재분배에 대한 태도, 복지재원마련에 대한 견해, 복지대상범위에 대한 견해, 구체적 복지개혁 방향에 대한 견해, 전반적인 정치적·사회적 인식과 태도, 정치참여와 성향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2. 측정

1) 결과변수: 복지인식

복지인식은 복지제도를 둘러싼 가치, 태도, 행동지향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정도나 정부의 복지지출에 대한 동의나 의견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치와 태도는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과 복지실천의지로 구체화되고 이들의 상호결합을 통해 지속적인 신념을 형성한다.

‘정부의 복지책임지지’는 사회적 위험 및 욕구에 대한 대응체계를 제공하는 주된 복지공급주체로서의 정부의 책임에 대한 선호도를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개인적 선택의 자유, 경쟁을 강조하는 사적복지책임주의와 평등, 연대 등을 기초로 한 공적복지책임주의 간 역할분담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역동성을 나타냈다.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정도를 묻는 ‘정부의 복지책임지지’는 “귀하는 다음 각 사항들이 얼마나 정부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매우 반대함’부터 ‘매우 동의함’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설문에서 제시된 영역은 소득격차해소, 실업자 지원, 최소한의 생계보장, 부모 및 아동 돌봄 지원, 무상교육, 건강보험 등 7 문항이며, 7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공적복지책임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의 정부의 복지책임 지지의 측정항목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334$ 이다. 문항 간 내적 일치성을 평가하는 Cronbach's 알파계수의 유의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0.3 이하이면 약한 응집력, 0.7이상이면 강한 응집력, 그리고 사이 값이면 보통의 응집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Nunnally, 1978; 박정훈, 2008 재인용). 이에 ‘정부의 복지책임지지’는 측정항목에 대해 보통 수준의 응집력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한다.³⁾

3) 7개 문항과 관련된 정부의 복지책임지지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KMO와 Bartlett 구형성 검정을 한 결과, KMO 값이 0.649로 보통수준이며, Bartlett 구형성검정치가 1980.354($p < .001$)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7개 문항 중 부모돌봄책임의 공통성(.295)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노령, 질병, 장애, 빈곤 등 사회적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모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는 복지재정확대에 대한 동의 및 복지확대를 위한 조세부담의사를 묻는 것으로 복지에 대한 지지견해와 함께 재정적 지불능력을 복합적으로 반영한다.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은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건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에 대하여 ‘매우 반대함’부터 ‘매우 동의함’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코딩된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복지비용부담에 대한 수용의지가 높은 것이다.

2) 설명변수

(1) 물질적 희생

복지지위의 부담-혜택 간 격차에서 발생하는 ‘물질적 희생’은 조사대상자가 속한 가구단위에서 발생하는 복지제도 일반을 둘러싼 부담과 혜택 간의 차이로 측정할 것이다. 복지제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물질적 비용(세금)이 물질적 편익(급여)보다 큰 경우 ‘물질적 희생’이 발생한다고 파악할 것이다. 각 가구에 속한 가구구성원은 복지제도 일반에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평가하며, 정책 영역과 대상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을 공동으로 꾸려나가는 가구 전체의 물질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에 대한 지지와 반대 입장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혜택은 응답자 가구의 월평균 사회보장급여액을 통해 측정할 것이다. 사회보장급여액은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액과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공적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기타정부보조금(사회수당 성격의 인구학적급여(demogrants)⁴⁾, 취약계층보조⁵⁾, 기타보조금⁶⁾의 수급액을 합산

세대에 대한 복지책임은 고령화시대의 핵심적인 정부의 역할이라 판단되어 분석에 포함하였다.

4)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양육수당(영유아 양육지원) 및 보육료지원

5) 한부모가족지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학비지원, 긴급복지지원금, 근로장려세제, 급식비지원,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전기료, 가스비 등), 통신 감면 또는 보조(전화비, 인

하여 구하였다. 이 변수에는 노인·장애인·아동 등을 대상으로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로 인한 편익은 반영되지 않았다. 전체 보건복지 예산 중 사회서비스 관련 지출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일 뿐만 아니라(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편익은 비화폐적(non-monetary), 비가시적(intangible)이며(김태성·성경륜, 2009), 경험한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실질적으로 환가되는 경제적 이익의 측정 역시 상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장 현금 급여만을 대상으로 전반적 복지제도를 통해 얻는 화폐적이며(monetary), 가시적인(tangible) 물질적 혜택을 측정하고자 한다.

복지부담은 응답자 가구의 월평균 조세 및 사회보장부담금(사회보험료지출)의 합으로 측정할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사회적 보호에 대한 재정충당 전략을 크게 조세에 의존하는(tax-finance) ‘베버지리형 복지국가 전략’과 사회보험 가입자의 기여금에 의해 충당되는(contribution-financed) ‘비스마르크형 복지국가 전략’으로 범주화하였다(Cichon et al, 2004; 김성욱, 2012 재인용). 강제성(기여금)과 일반성(일반조세)이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구분되는 전략 중 사회보장기여금에 의존하는 유형은 보험수리원칙에 의거하여 복지급여가 기여금을 납부한 대상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일반조세에 근거하는 유형은 복지급여를 보다 광범위한 대중에게 지급할 수 있어 보편주의 복지국가와 친화적인 조세구조를 가지게 된다(윤홍식, 2011).

이에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재정충당 전략범주인 일반조세(소득, 이윤, 자본취득에 대한 세금[소득세, 종합소득세], 재산관련 세금[재산세, 부동산세, 자동차세], 기타[주민세, 환경개선부담금, 취득등록세 등])⁷⁾ 및

터넷 등)

6)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 농어업 정부보조금, 기타 바우처지원금, 기타보조금

7) OECD 조세분류 체계에 따르면 총 조세수입이란 ‘소득, 이윤, 자본취득에 대한 세금(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고용에 관한 세금(taxed on payroll and workforce: 고용주 기여분)’, ‘재산관련 세금(taxed on property: 재산세: 부동산과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세금(taxes on goods and services: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물품세와 관세))’, ‘기타(other taxes)’의 합으로 구성된다.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의 합으로 각 가구가 부담하는 화폐적이며(monetary), 가시적인(tangible) 복지부담을 측정한다. 복지부담 중 보험수리적 원리에 의거해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의 특성상, 사회보험료지출이 온전한 의미의 물질적 비용이라 간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사회보험은 ‘위험분산’이라는 보험기술을 사회적 보호의 수단으로 사용하며, 가입자의 ‘기여’라는 급부에 따라 ‘보장’이라는 반대급부가 결정되는 운영원리 측면에서 민간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 달리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위험수준이 아닌 사회의 평균적 위험발생가능성과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개별부담에 관계없이 수급자의 복지욕구 및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제공하기에 수직적 재분배 및 사회적 연대를 위한 비용(cost)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는 복지국가에 대한 납세수준을 가늠케 하는 대리지표로써 개인의 소득에 기초하여 부과될 뿐만 아니라, 여타 직·간접세와는 달리 사회보험이라는 복지제도에 귀착되는 물질적 비용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직면한 사회적 위험 따라 균등한 급여를 지급하는 건강·산재·고용보험과 달리 연금의 기여기간 및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급여를 제공하기에 타 제도에 비해 보험수리적인 특성이 더욱 중시된다. 그럼에도 최근 재정불안정성이나 기금고갈이슈를 이유로 보험료 인상, 소득 대체율의 조정 등의 개혁안을 내놓고 있어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은 점차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전병목, 2007). 현 세대의 부담을 미래세대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연금구조⁸⁾에서 향후 기여에 상응하는 연금수령액이 보장될 것이라는 신뢰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다. 이처럼 사회보장성 조세부담에 대한 장기적 보상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

8) 한국의 연금제도는 그 재원마련방법에 있어 부분적립방식(partial funding)을 택하고 있지만 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실제 기금운용에 있어 현 노동세대의 기여에 의존하는 형국이며, 기금 고갈 이후에는 현 노동세대가 현 은퇴세대의 연금급여를 부담하고, 미래의 노동세대가 현 노동세대의 연금을 지불해야하는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 보인다(윤석명, 2007).

서 보험수리적 원칙이 강한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료지출은 ‘물질적 희생(material sacrifice)’을 감수하게 하는 위협으로 인식될 공산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월평균 조세 및 사회보험료지출의 합으로 복지부담을 측정하기로 한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복지제도를 둘러싼 부담(월평균 조세 및 사회보험료지출)과 혜택(월평균 사회보장급여액)의 격차를 이용하여 각 개인이 속한 가구의 복지지위 상의 ‘물질적 희생’ 수준을 측정하고자 한다.

(2) 정부신뢰

본 연구는 ‘정부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정향으로서 정부의 성과나 산출물에 대한 평가’, 혹은 ‘국민의 기대에 정부가 부응하는지에 대해 시민들이 가지는 태도’로(Hertherington, 1998) 정부신뢰를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으로 유능한 정부 역할수행에 대한 기대(Barber, 1983)인 ‘기능적 신뢰’를 기본으로 하되, 여러 정책기능 중 사회정책기능에 대한 평가에 집중하여 정부의 사회정책의 산출물이 해당 정책내용이 갖추어야 할 규범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로 정부신뢰를 측정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정책에 대한 기능적 신뢰는 “귀하는 우리나라 정부가 사회정책과 관련된 다음의 각 정책영역에서 얼마나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매우 못하고 있음’에서 ‘매우 잘하고 있음’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문에서 제시된 영역은 보건의료,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보육서비스 및 아동복지, 빈곤예방 및 감소, 실업대응, 성 평등 수준 제고, 주거복지, 교육 등 9 문항이다. 9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정책에 대한 기능적 신뢰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의 정부신뢰의 측정항목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21$ 으로 0.7을 상회하고 있어 내적 일관성이 검증되었다. 9)

9) 9개 문항과 관련된 정부신뢰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KMO와 Bartlett 구형성 검정을 한 결과, KMO 값이 0.860로 높은 수준이며, Bartlett 구형성검정치가 10117.744($p < .001$)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검

3) 통제변수

(1) 인구사회학적 요인

여성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가족보호의 부담 등으로 인해 남성보다 복지제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으며(Svallfors, 1997), 여성의 고용증가는 주로 공공부문의 확대에 기인한다는 측면에서(Sainsbury, 1996, 안상훈, 2000) 복지친화적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연령변수 또한 연구에 따라 결과의 차이를 보이지만, 복지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Van Oorschot(2002)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젊은 계층이 상대적으로 복지국가로부터 많은 편익을 누리므로 복지국가 지지도가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연령층 일수록 복지국가 지지도가 높다는 주장도 있다(Blekesaune and Quadagno, 2003). 결국 연령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관계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교육수준은 교육을 통해 획득된 사회적 지위에 따라 복지태도에 변화를 가져온다(Derks, 2005). 각 사회의 교육의 특성은 해당국가의 전반적인 복지인식에 따라 복지태도를 공고히 하거나 복지태도에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각 사회의 교육의 특성에 따라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백정미 외, 2008).

(2) 가구구성원특성 요인

각 개인은 본인 및 본인이 속한 집단에 현재 혹은 미래에 개인적인 이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큰 정책을 선호하고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Lipsmeyer & Nordstrom, 2003). 복지인식을 설명하는 영향요인 중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잠재적 수혜가능성을 가진 가구구성원의 동거여부를 통제하여야 현재적 복지권리(편익)를 누리는 가구의 권리-의무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가구구성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증되었다. 9개 문항 중 성 평등 수준 제고의 공통성(.384)을 제외하고는 모두 0.4 이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최근 여성친화적인 사회정책이 늘어남을 감안하여 성평등 수준 제고 문항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동거하는 가구, 18세 미만 아동이 동거하는 가구, 장애인이 동거하는 가구로 각각 나누어 해당 가구구성원 동거여부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3) 정치성향 및 복지관련 가치관 요인

가치에 기반을 둔 이론은 개인이 유지해온 신념이나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가치관의 영향력에 주목한다. 개인의 태도나 의식은 개인이 일관되게 유지해온 이념적 성향이나 중심적 가치관에 의해 형성, 전개된다는 가정 하에, 해당 논의들은 개인의 정치적 의식 형성의 근거를 정치성향, 정당소속감, 분배에 대한 규범적 태도, 복지체제의 역할 및 복지대상자에 대한 가치판단 등에서 찾고 있다(이아름, 2010; 이중섭, 2009; Craig & Gainous & Martinez, 2006; Rudolph & Evans, 2005; Blekesaune & Quadagno, 2003).

공동체주의에 근거하여 평등한 분배정의를 지향할수록 정부의 복지책임을 강조하는 반면(Craig & Gainous & Martinez, 2006), 시장에서의 노동을 통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개인주의는 비우호적 복지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경제적 개인주의를 신봉하는 우파적 이념, 즉 보수적 정치성향을 가질수록 정부의 복지책임을 반대하는 경향도 일관되게 확인되었다(Rudolph & Evans,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집합주의와 개인주의로 대별되는 분배정의에 대한 가치와 신념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보수-진보 간 스펙트럼에서 발견되는 정치성향(“귀하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배정책의 강화에 대한 동의 정도(“귀하는 성장과 분배 중에서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분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의 확대가 노동윤리를 훼손하는지에 대한 인식(“사회복지를 늘리면 국민들의 일할의욕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수혜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빈곤층은 대부분 게으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등으로 나누어 측정하기로 한다.

[표 1] 주요변수의 정의 및 측정항목

변수명	변수의 조작적 정의	측정항목
결과 변수	정부의 복지책임지지: 사회적 위험 및 욕구에 대한 대응체계를 제공하는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한 지지도	“귀하는 다음 각 사항들이 얼마나 정부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1, 매우 반대한다=5) <일부 문항 역코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것 •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 •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생계보장 • 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음(개인책임을 정부책임으로 역코딩) •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무상으로 제공 • 대학교육까지 무상으로 제공 • 건강보험은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민간보험을 이용해야 함 (개인책임을 정부책임으로 역코딩)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 적극성 수준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매우 동의한다=1, 매우 반대한다=7) <역코딩>
설명 변수	물질적 희생	복지지위 상의 부담-혜택 간 격차 부담(가구 월평균 일반 조세 및 사회보험료지출(단위: 백만원) - 혜택(가구 월평균 사회보장급여(단위: 백만원)

	정부 신뢰	사회정책에 대한 기능적 신뢰: 정부의 사회정책 역할수행에 대한 기대	<p>“귀하는 우리나라 정부가 사회 정책과 관련된 다음의 각 정책 영역에서 얼마나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p> <p>(매우 잘하고 있다=1, 매우 잘 못하고 있다=5)<역코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노인의 삶의 질 유지 • 장애인 지원 서비스 • 보육서비스 및 아동복지 • 빈곤 예방 및 감소 • 실업에 대한 대응 • 성 평등 수준 제고 • 위생적이고 적절한 주택에서 거주 • 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교육
통제 변수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	응답자의 성별	남자=1, 여자=0
	연령	응답자의 연령	조사시점(2013) - 출생년도
	교육 수준	응답자의 교육연수	총 교육연수
통제 변수 :가구 구성원 특성 요인	노인 가구원 동거 여부	가구구성원 중 65세 이상 노인 동거여부	해당 가구구성원 동거하는 경우=1 해당 가구구성원 동거하지 않는 경우=0
	아동 가구원 동거 여부	가구구성원 중 18세 미만 아동 동거여부	해당 가구구성원 동거하는 경우=1 해당 가구구성원 동거하지 않는 경우=0

	장애인 가구원 동거 여부	가구구성원 중 장애인 동거여부	해당 가구구성원 동거하는 경우=1 해당 가구구성원 동거하지 않는 경우=0
통제 변수 :정치 성향 및 가치관 요인	정치 성향 (보수)	응답자가 가진 정치성향	“귀하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진보적=1, 매우 보수적=5)
	분배 동의	분배정책 강화에 대한 동의	“귀하는 성장과 분배 중에서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분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장만이 중요하다=1, 분배만이 중요하다=4)
	복지 국가 역할에 대한 견해	복지의 확대가 노동윤리를 훼손하는지에 대한 인식	“사회복지를 늘리면 국민들의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1, 전혀 그렇지 않다=7) <역코딩>
	복지 수급자에 대한 견해	복지수혜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빈곤층은 대부분 게으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1, 매우 반대한다=5) <역코딩>

제 4절 분석방법

본 연구는 물질적 희생, 정부신뢰, 정부의 복지책임지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 변수의 관계성을 보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고,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기초적인 통계자료를 얻었다. 이를 통해 자료의 결측치와 이상치를 확인한 후, 연구대상 및 주요변수들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Cronbach's alpha를 통해 주요 변수들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가구구성원 특성, 가구 경제적 특성, 정치적 견해 및 복지관련 가치관에 따라 일관된 복지인식을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 및 ANOVA를 사용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들 간의 관련성과 다중공선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단순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와 공차한계(Tolerance)를 확인하였다. 또한 각 변수들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검토하였다.

넷째, 물질적 희생, 정부신뢰가 정부의 복지책임지지 및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통제변수와 물질적 희생, 정부신뢰를 포함하는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물질적 희생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가 정부신뢰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종 통제변인과 물질적 희생, 정부신뢰를 투입한 다음, 물질적 희생과 정부신뢰 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¹⁰⁾.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단계에서 총괄 F 검증(omnibus F

10)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의 방향(direction) 또는 강도(strength)에 영향을 주는 정성적 또는 정량적 변수를 의미한다(Baron & Kenny, 1986).

test)을 통해 R^2 의 변화량의 유의수준을 확인하여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한다(Frazier et al. 2004).

이 때, 연속변인으로 이루어진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의 원자료값으로 상호작용항을 구성할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하며, 추정치의 왜곡과 검증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Frazier et al. 2004). 이에 독립변수, 조절변수, 그리고 상호작용항 간의 다중공선성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독립변수, 조절변수를 평균집중화(Mean Centering)화 한 후, 평균 집중화 한 두 값을 곱하여 상호작용항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모형 설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복지인식을 구성하는 ‘정부의 복지책임지지’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를 각각 종속변수로 두어 2가지 분석모형을 설정한다. 각 분석모형에서는 총 4단계 모형을 구성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첫째,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지던 인구사회학적 변인, 가구구성원특성 변인, 정치성향 및 가치관 변인을 1단계에 투입하였고, 이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물질적 희생을 2단계에 투입하였으며, 각종 통제변인 및 물질적 희생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부신뢰를 3단계에 투입하였고, 4단계에서는 동일한 조건 하에 물질적 희생, 정부신뢰, 이들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을 추가로 투입하여 종속변수인 ‘정부의 복지책임지지’ 및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하도록 한다.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이후의 설명력(R^2)이 투입하기 이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면 조절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위의 연구모형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text{분석1: } Y_1 = \alpha_1 + \beta_1 X + \beta_2 W + \beta_3 XW + \gamma_1 D + u_1$$

(Y_1 = 정부의 복지책임지지, X = 물질적 희생, W = 정부신뢰, D = 통제변인, α =상수 u =오차)

$$\text{분석2: } Y_2 = \alpha_2 + \beta_4 X + \beta_5 W + \beta_6 XW + \gamma_2 D + u_2$$

(Y_2 =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 X = 물질적 희생, W = 정부신뢰, D = 통제변인, α =상수, u =오차)

제 4장 연구결과

제 1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살펴보자. 성별의 경우, 남성이 1956명(46.4%), 여성이 2258명(53.6%)으로 여성이 다소 많았다. 연령의 경우 만 19세 이상 가구원을 복지인식 부가조사의 표본으로 추출했기에 19세 이하 조사대상자는 없으며, 20대가 507명(12.0%), 30대가 819명(19.4%), 40대가 965명(22.9%), 50대가 916명(21.7%), 60대 이상이 1007명(23.9%)으로 각 세대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교육수준은 전문대 혹은 4년제 대학 졸업 조사대상자가 1828명(43.4%)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이 1235명(29.3%), 중학교 졸업이하가 998명(23.7%), 대학원 이상이 154명(3.6%)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잠재적 수혜가능성을 가진 가구구성원의 존재여부를 살펴보자. 65세 이상 노인가구원이 동거하는 조사대상자는 1198명(28.4%)이었으며, 18세 미만 아동가구원이 동거하는 조사대상자는 1655명(39.3%), 장애인가구원이 동거하는 조사대상자는 722명(17.1%)이다.

연구대상자의 정치성향 및 복지관련 가치관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연구대상자 중 자신의 정치성향이 중도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1606명(38.1%)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수가 1351명(32.1%), 진보가 1018명(24.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은 대체적으로 중도·보수적인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변수		빈도(명)	백분율(%)	
인구사회학적특성	성별	남	1956	46.4	
		여	2258	53.6	
	연령	20대	507	12.0	
		30대	819	19.4	
		40대	965	22.9	
		50대	916	21.7	
		60대 이상	1007	23.9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998	23.7	
		고등학교 졸업	1235	29.3	
		전문대 혹은 4년제	1828	43.4	
대학원 이상		154	3.6		
가구구성원특성	노인가구원 동거여부	동거	1198	28.4	
		비(非)동거	3016	71.6	
	아동가구원 동거여부	동거	1655	39.3	
		비(非)동거	2559	60.7	
	장애인가구원 동거여부	동거	722	17.1	
		비(非)동거	3492	82.9	
정치성향			보수	1351	32.1
			중도	1606	38.1
			진보	1018	24.2
			선택할 수 없음	238	5.7

(N=4214)

2. 연구대상자의 가구 경제적 특성

조사대상자가 속한 가구가 부담하는 연간 복지관련 부담 및 혜택은 [표 3]와 같다. 다음의 변수들은 ‘물질적 희생’ 개념을 측정하는 토대가 된다.

해당 가구구성원 전체의 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소득과 관련한 연간 부담하는 세금의 평균은 132.25만원이며, 재산세, 부동산세 등의 연간 재산 관련 부담하는 세금의 평균은 49.24만원, 위의 세금과 더불어 주민세, 환경부담금, 등록세 등 기타 세금까지 포함한 연간 세금 부담액의 평균은 227.55만원 이다. 사회보장부담금은 본인부담 보험료만 포함하며 사업장이나 제 3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제외한 비용이다. 연간 연구대상자가 속한 가구구성원 전체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141.27만원, 건강보험료는 128.97만원, 고용보험료는 12.20만원이다. 연간 부담하는 사회보장부담금의 평균은 283.63만원 이다. 각종 조세와 사회보험료 지출을 합산한 연평균 총 복지부담은 511.19만원이다.

해당 가구구성원 전체가 받는 연간 사회보험소득의 평균은 208.21만원이며, 연간 공공부조 소득의 평균은 23.82만원이며, 사회수당(100.32만원), 취약가구지원(36.19만원), 기타보조금(25.79만원)의 합인 연간 기타정부보조금의 평균은 162.31만원이다. 조사대상자들이 얻는 연평균 총 복지혜택은 394.34만원이다. 총 복지혜택에서 사회보험소득, 공공부조소득, 기타정부보조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차원의 보건복지분야 지출구조를 그대로 반영한다. 실제로 2014년 국가예산 357조원 중 보건복지분야 예산은 106조(29.6%)를 차지하였다. 보건복지예산의 부분별 재원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공적연금, 고용 및 산재 보험, 건강보험료 지원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에 복지예산 총액의 52.7%인 55조 7천억 가량이 배분되어 보건복지예산총액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 뒤를 이어 아동·가족·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수당 및 서비스에 5조 3천억원(5.0%),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수당 및 서비스에 9조 5백억원(8.6%), 기초생활보장에 8조 8천억원(8.3%) 등이 차례로 배분된다.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에 진입했지만, 절반이 넘는 재원은 가입자의 기여와 급여에 토대를 두는 사회보험제도에 할당되는 형국이며, 취약계층 및 국민일반의 복지체감과 관련되는 공공부조 및 노인, 장애인, 가족,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수당 및 서비스 급여 등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표 3] 연구대상자의 가구 경제적 특성 연간 지출 및 소득액 (단위:만원)

구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복지 부담	세금	소득, 이윤, 자본취득 관련 세금	132.25	395.80	0	5640
		재산관련 세금	49.24	56.47	0	852
		전체	227.55	492.81	0	5904
	사회보장 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	141.27	141.55	0	812.40
		건강보험료	128.97	126.56	0	1370.40
		고용보험료	12.20	17.66	0	292.80
		전체	283.63	254.43	0	1776
	전체		511.19	677.98	0	7680
복지 혜택	사회보험 소득	공적연금 연간소득	183.87	664.19	0	7920
		고용보험 연간소득	15.76	85.58	0	880
		산재보험 연간소득	8.58	146.03	0	3371
		전체	208.21	689.26	0	7920
	공공부조 소득	국민기초 생활보장급여	23.82	133.99	0	1906
	기타 정부 보조금	사회수당	100.32	234.57	0	2326
		취약가구 지원	36.19	137.90	0	2164
		기타 보조금	25.79	95.39	0	1350
		전체	162.31	311.27	0	2886
	전체		394.34	756.01	0	7920

제 2절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각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다. 물질적 희생, 정부신뢰, 정부의 복지책임지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복지지위의 부담-혜택 간 격차에서 발생하는 연구 대상자의 월평균 물질적 희생은 9.74만원이며, 이는 복지제도를 통해 받는 편익 보다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9.74만원 가량 크다는 의미이다¹¹⁾. 이는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복지제도 밖에서 복지납세자로서의 의무만을 지고 있으며, 복지프로그램의 성숙도 또한 낮아 복지권리를 누리는 수급자역시도 충분한 복지급여를 받지 못해 복지제도와 관련하여 물질적 편익보다는 비용이 크다는 의미이다. 물질적 희생의 최소값은 월평균 -651만원(부담보다 혜택을 크게 누려, 물질적 이득이 발생함을 뜻함), 최대값은 월평균 640만원으로 나타났다(혜택보다 부담을 크게 가져 물질적 희생이 발생함을 뜻함).

정부의 사회정책에 대한 기능적 신뢰는 총 9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신뢰의 평균은 26.49점이고, 최소값은 9점에서 최대값은 45점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한 지지도는 총 7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복지책임주체인식의 평균은 23.16점이고, 최소값은 10점에서 최대값은 35점으로 나타났다.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을 나타내는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는 총 1문항에 대해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복지비용부담의지의 평균

11) 응답자 가구에서 발생하는 물질적 희생의 분포를 살펴보면, 복지부담 보다 혜택이 큰 집단(물질적 희생의 값이 음수인 경우)은 전체 연구대상자의 37.8%(1593명)이며, 편익보다 비용이 큰 집단(물질적 희생의 값이 양수인 경우)은 62.2%(2621명)으로 물질적 희생이 발생하는 가구가 1.5배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 4.54점이며, 최소값은 1점에서 최대값은 7점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자료의 정규성 여부를 확인할 때 참고하는 통계치로는 왜도와 첨도가 있다. 왜도(skewness)는 자료의 대칭성 정도를 나타내며, 첨도(kurtosis)는 정규분포의 곡선에 대해 분포의 중간이나 꼬리에 있는 점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일변량 왜도 지수의 절대값이 3.0보다 큰 경우에는 ‘극단적인’ 왜도라고 인식하며, 일변량 첨도 지수의 절대값이 10보다 클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Hoyle, 1995).

이를 기준으로 주요변수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면, 왜도는 -0.462~0.085의 분포를 보이나, 첨도의 경우 물질적 희생을 제외하고는 -0.775~0.609의 분포를 보여 정규성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4]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 및 정규분포성 검토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물질적 희생 (단위: 만원)	9.74	0.89	-651	640	-.310	13.743
정부신뢰	26.49	4.92	9	45	.085	.355
정부의 복지책임지지도	23.16	3.11	10	35	-.187	.609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	4.54	1.57	1	7	-.462	-.775

2.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복지인식

본격적인 연구가설 검증에 앞서 본 연구의 분석 자료를 통해서 연구대상자들의 각종 특성에 따른 복지인식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5]와 [표 6]과 같다.

우선 정부의 복지책임지지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표 5]), 연령, 교육수준, 노인가구원 동거여부, 아동가구원 동거여

부, 물질적 희생 수준, 정치성향에 따라 정부의 복지책임지지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대와 60대 이상 조사대상자들은 20대, 30대, 40대 집단에 비해 정부의 복지책임을 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40.975$, $p<.001$).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중졸, 고졸, 대졸 집단 순으로 정부의 복지책임을 지지하였다($F=23.002$, $p<.001$).

가족 구성원 중 노인, 아동 가구원이 동거하는 경우에 따라 정부의 복지책임지지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었다. 노인가구원이 동거하는 경우보다, 동거하지 않는 집단에서 정부의 복지책임을 더욱 강조하였으나($t=-4.168$, $p<.001$), 이와는 반대로 아동 가구원이 동거하는 집단에서는 비동거집단보다 정부의 복지책임을 더욱 선호하였다($t=8.862$, $p<.001$).

가구 경제적 특성에 따라서도 정부의 복지책임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F=5.681$, $p<.01$). 복지 부담이 혜택보다 커서 물질적 희생이 발생하는 집단(200만원~ 640만원)은 그 보다 부담이 적은 집단(0만원~200만원)이나 혜택이 부담보다 큰 집단(-300만원~0만원)에 비해 정부의 복지책임을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복지 지위와 결부된 물질적 이해관계에서 부담이 커질수록 정부의 복지책임 확대에 재원 부담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정치성향에 따라서도 정부의 복지책임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F=64.156$, $p<.001$). 보수, 중도, 진보적 정치성향 순으로 복지의 국가책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관련 가치관에 따라서도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분배보다는 성장을 강조하는 집단이 분배를 강조하는 집단보다 정부의 복지책임을 덜 지지하거나, 혹은 중립적인 의사를 가진 집단보다 정부의 복지책임을 덜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F=15.008$, $p<.001$). 또한 복지수혜자가 게으르다고 생각하여 복지대상자의 의존성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 우려감을 표명할수록, 정부의 복지책임을 덜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F=105.423$, $p<.001$), 복지확대가 노동윤리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보는 집단에서는 복지확대가 수혜자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고 보는 집단이나 혹은 중립적인 의사를 가진 집단보다 정부의 복지책임을 선호하는 복지인식을 보였다($F=116.385$, $p<.001$).

[표 5] 연구대상자 특성별 정부의 복지책임지지도 차이

구분	집단특성		빈도 (명)	정부의 복지책임 지지도 평균(표준편차)	t/ F	사후 검정
인구 사회학 특성	성별	남	1947	23.14 (3.10)	$t = -0.373$	-
		여	2242	23.17 (3.12)		
	연령	20대 (a)	506	23.81 (2.93)	$F = 40.975^{***}$	a>d, e b>d, e c>d, e
		30대 (b)	816	23.84 (3.05)		
		40대 (c)	962	23.50 (3.14)		
		50대 (d)	912	22.69 (2.99)		
		60대 이상 (e)	993	22.37 (3.0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a)	984	22.52 (2.99)	$F = 23.002^{***}$	c>b>a d>a
		고등학교 이하 (b)	1230	23.10 (2.96)		
		전문대 혹은 4년제 (c)	1821	23.53 (3.19)		
		대학원 이상 (d)	154	23.30 (3.38)		
가구 구성원 특성	노인가구원 동거여부	동거	1181	22.84 (3.17)	$t = -4.168^{***}$	-
		비(非)동거	3008	23.28 (3.07)		
	아동가구원 동거여부	동거	1648	23.68 (3.07)	$t = 8.862^{***}$	-
		비(非)동거	2541	22.82 (3.08)		
	장애인가구원 동거여부	동거	715	23.07 (2.97)	$t = -0.857$	-
		비(非)동거	3474	23.17 (3.14)		
가구 경제적 특성	물질적 희생	-650만원~ -300만원 미만 (a)	49	21.89 (3.90)	$F = 5.681^{**}$	b, c>d
		-300만원~ 0만원 (b)	1539	23.21 (3.12)		

정치 성향 및 가치관 요인		0만원 이상~ 200만원(c)	2536	23.18(3.06)		
		200만원이상~ 640만원(d)	66	22.06(3.52)		
	정치성향	보수(a)	1345	22.53(3.22)	F= 64.156***	c>b>a
		중도(b)	1602	23.32(2.85)		
		진보(c)	1009	23.92(2.97)		
	분배동의 인식	찬성(a)	341	23.09(3.31)	F= 15.008***	a, b>c
		중립(b)	3494	23.25(3.01)		
		반대(c)	353	22.30(3.67)		
	복지수혜자 에 대한 부정적 인식	찬성(a)	1382	22.26(3.24)	F= 105.423***	c>b>a
		중립(b)	1229	23.24(2.69)		
		반대(c)	1578	23.88(3.10)		
	복지국가 역할에 대한 부정적 인식	찬성(a)	1834	22.41(3.08)	F= 116.385***	c>a, b
		중립(b)	691	23.17(2.66)		
		반대(c)	1664	23.97(3.10)		

†p< .1, *p < .05, **p < .01, ***p< .001

다음으로 복지확대를 위한 복지비용부담의지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표 6]), 성별, 연령, 교육수준, 노인가구원 동거 여부, 아동가구원 동거여부, 장애인가구원 동거여부, 물질적 희생, 정치 성향, 복지관련 가치관에 따라 복지비용부담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가 높았다($t=4.589, p<.001$). 연령별로는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이전인 20대 집단에 비해 40대나 50대의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이 높았으며, 정부의 복지책임을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집단이 오히려 20대, 30대, 40대에 비해 복지재원부담의 적극성을 보여 60대 이상 집단에서 모순적 복지인식이 확인되었다($F=25.580, p<.001$). 노령, 질병, 장애, 빈곤 등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는 고연령 집단에서 정부에 의한 복지책임을 비우호적인 것은 아직 유교 문화의 영향 하에 있는 노인세대의 정치사회적 보수성이 복지정책에 따른 자기이익에 우선하기 때문이다(이중섭, 2009). 그러나 이들 집단은

퇴직 등으로 실질적인 경제활동 영위가 어려워 복지재원마련의 주축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지재원부담에 적극적인 모순적 태도를 표출하였다. 이에 대해 ‘작은정부’를 강조하는 정치사회적 보수성의 영향과,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제도 등 보편적 복지혜택의 확대로 본인 세대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단 간의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고졸, 대졸집단보다는 중졸이하집단이 복지재원 부담의 적극성을 보여($F=13.871$, $p<.001$) 중졸, 고졸, 대졸 집단 순으로 정부의 복지책임을 선호하였던 것과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평등, 연대성, 상호호혜 등 복지국가 가치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기에 사회적 위험 및 욕구를 주로 대응할 복지공급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선호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그러나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득의 증가로 인해 복지재원부담의 주축이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수용에는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복지정책의 주된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노인, 아동 가구원의 동거여부에 따라 복지비용부담의지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노인가구원이 동거하지 않는 경우보다, 동거하는 집단에서 적극적인 비용수용의지를 보였으며($t=5.039$, $p<.001$), 아동가구원 비동거집단이 동거집단보다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수용의지가 높았고($t=-2.717$, $p<.05$), 장애인가구원의 경우 동거집단이 비동거집단의 경우보다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사를 보였다($t=3.254$, $p<.001$). 요컨대, 노인, 장애인 가구원이 동거하는 경우에는 복지재원마련에 대한 동의 의사를 보이지만, 아동 가구원이 동거하는 경우,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에 소극적인 의사를 보였다. 이는 최근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무상급식 등의 보편적 복지의 확대로 아동가구의 복지수혜경험이 증대되었지만, 노인, 장애인 가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으로 재원 부담의 주축이 되는 현실을 부담스러워 하는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가구 경제적 특성에 따라서도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F=26.487$, $p<.001$). 복지 부담이

혜택보다 커서 물질적 희생이 발생하는 집단(200만원~ 640만원), 그 보다는 물질적 희생이 적은 집단(0만원~200만원), 혜택이 부담보다 큰 집단(-300만원~0만원) 순으로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 부담의 적극성을 보였다. 즉 세금부담은 적는데 복지혜택은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집단의 비용부담의지가 더 높은 반면, 제한적인 복지수급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재원부담의 주축이 되는 집단은 소극적인 비용수용의지를 비쳤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물질적 희생의 수준이 높은 집단의 복지인식개선을 위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치성향에 따라서도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F=7.517$, $p<.001$). 진보적 정치성향을 가진 집단은 보수, 중도 집단보다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한 지지와 더불어 적극적인 복지비용부담수용성을 보였다. 복지관련 가치관에 따라서도 복지비용부담의지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하는 집단이 중립적인 의사를 가진 집단보다 더욱 적극적인 비용부담의지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6.553$, $p<.001$). 복지대상자의 의존성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 우려감을 표명하지 않거나($F=17.224$, $p<.001$), 복지확대가 수혜자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보는 집단에서 ($F=6.790$, $p<.001$) 복지재원부담의 적극성 보였다. 요컨대, 정치성향 및 복지관련 가치관에 따라서는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과 복지실천을 위한 행동지향 간에 일관된 인식이 확인되었다.

[표 6] 연구대상자 특성별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 차이

구분	집단특성		빈도 (명)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 평균(표준편차)	t/ F	사후 검정
인구 사회학 특성	성별	남	1956	4.66(1.61)	t= 4.589***	-
		여	2258	4.43(1.52)		
	연령	20대(a)	507	4.00(1.65)	F= 25.580***	c>a d>a e>a,b,c
		30대(b)	819	4.45(1.61)		
		40대(c)	965	4.50(1.56)		
		50대(d)	916	4.64(1.56)		
		60대 이상(e)	1007	4.82(1.4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a)	998	4.79(1.40)	F= 13.871***	a>b, c
		고등학교 이하(b)	1235	4.38(1.57)		
		전문대 혹은 4년제(c)	1828	4.50(1.61)		
		대학원 이상(d)	154	4.61(1.77)		
가구 구성원 특성	노인가구원 동거여부	동거	1198	4.72(1.43)	t= 5.039***	-
		비(非)동거	3016	4.46(1.61)		
	아동가구원 동거여부	동거	1655	4.47(1.60)	t= -2.717*	-
		비(非)동거	2559	4.58(1.54)		
	장애인가구원 동거여부	동거	722	4.70(1.50)	t= 3.254***	-
		비(非)동거	3492	4.50(1.58)		
가구 경제적 특성	물질적 희생	-650만원~ -300만원 미만(a)	49	4.38(1.70)	F= 26.487***	b>c>d
		-300만원~ 0만원(b)	1555	4.80(1.42)		
		0만원 이상~ 200만원(c)	2544	4.40(1.62)		
		200만원이상~ 640만원(d)	66	3.85(1.45)		
정치 성향 및	정치성향	보수(a)	1351	4.51(1.54)	F= 7.517***	c>a, b
		중도(b)	1606	4.55(1.48)		

가치관 요인		진보 (c)	1018	4.74(1.60)		
	분배동의 인식	찬성 (a)	344	4.82(1.57)	F= 6.553***	a>b
		중립 (b)	3515	4.50(1.55)		
		반대 (c)	355	4.60(1.65)		
	복지수혜자 에 대한 부정적 인식	찬성 (a)	1392	4.50(1.58)	F= 17.224***	c>a, b
		중립 (b)	1236	4.36(1.53)		
		반대 (c)	1585	4.70(1.57)		
	복지국가 역할에 대한 부정적 인식	찬성 (a)	1850	4.48(1.55)	F= 6.790***	c>a, b
		중립 (b)	697	4.44(1.47)		
		반대 (c)	1667	4.65(1.62)		

†p< .1, *p < .05, **p < .01, ***p< .001

3. 변수 간 상관관계 결과

각 변수 간에 다중공선성 및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계수, 분산팽창인자(VIF), 공차한계(Tolerance)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모든 상관계수가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는 기준인 0.8보다 작게 나타났다. 분산팽창인자와 공차한계 역시 각각 2.5이하, 0.4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변수들 간에는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각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가구구성원특성별, 정치성향 및 복지관련 가치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적 희생과 정부신뢰, 정부의 복지책임지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성별과 정부신뢰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 = -.034$, $p < .05$). 즉 남성은 여성에 비해 현 정부의 사회정책에 대한 기능적 신뢰가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별은 정부의 복지책임지지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 = .071$, $p < .001$). 이를 통해 남성이 여성보다 복지비용을 부담하고자 하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출함을 알 수 있다.

연령과 물질적 희생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 = -.262$, $p < .001$). 한편, 연령과 정부신뢰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 = .368$, $p < .001$).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물질적 희생이 줄어들지만, 정부에 대한 기능적 신뢰는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연령과 정부의 복지책임지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r = -.179$, $p < .001$),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 = .139$, $p < .001$)를 보였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복지책임은 선호하지 않지만, 복지비용부담에 대한 수용성은 커지는 비(非)일관적 복

지인식이 나타난다.

교육수준의 경우 물질적 희생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r=.207, p<.001$), 정부신뢰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 상관관계를($r=-.335, p<.001$), 정부의 복지책임지지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r=.104, p<.001$),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r=-.046, p<.001$)를 보였다. 정부의 복지책임지지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가졌던 연령변수와는 반대 의미에서 복지인식의 비(非)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노인가구원동거여부는 연령이 나머지 변수와 가졌던 것과 유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동가구원 동거여부의 경우 물질적 희생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r=.119, p<.001$), 정부신뢰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r=-.166, p<.001$), 정부의 복지책임지지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r=.136, p<.001$),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수용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r=-.034, p<.05$) 보였다. 즉, 가구원 중 18세 미만 아동이 동거할수록 주요 경제활동인구에 속할 가능성이 커지기에 물질적 희생은 커지며, 정부의 복지책임지향성은 높아지나, 복지비용부담의사에는 소극적인 비(非)일관성이 나타난다.

정치성향 및 복지관련 가치관과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보수적인 정치성향은 물질적 희생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r=-.078, p<.001$), 정부신뢰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r=.104, p<.001$), 정부의 복지책임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r=-.194, p<.001$),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r=-.055, p<.01$) 보였다. 또한 복지가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생각을 가지거나, 복지수급자가 게으르다는 인식을 가질수록, 정부의 복지책임과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 의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하는 분배정의에 대한 동의는 정

부의 복지책임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r=.111$, $p<.001$),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와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r=.046$, $p<.01$) 보였다.

이에 비(非)일관적인 복지인식 경향을 보였던 인구사회학적요인, 가구구성원 특성요인과는 다르게 정치성향 및 복지관련 가치관 요인에 따라서는 정부의 복지책임지지 및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모두 일관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즉, 관련정책과의 이해관계보다 자신이 견지하고 있는 신념과 가치, 수급자 및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등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이 복지확대에 대한 지지와 더불어 지불의사를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행동지향으로 일관되게 표출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물질적 희생, 정부신뢰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복지책임지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물질적 희생의 경우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r=-.074$, $p<.001$)를 보였고, 정부의 복지책임지지와도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정부신뢰의 경우 정부의 복지책임지지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r=-.200$, $p<.001$),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r=.047$, $p<.01$)보였다. 정부신뢰는 복지인식에서 일관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 후술하는 분석모형을 통해 추가적인 규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7]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노인 동거	아동 동거	장애인 동거	정치 성향 (보수)	분배 동의	복지국가 역할인식	수급자 인식	물질적 희생	정부 신뢰	정부 복지 책임 지지	복지 확대를 위한 비용 부담 의지
1													
.035 ^{**}	1												
.153 ^{***}	-.612 ^{***}	1											
-.039 [*]	.539 ^{**}	-.365 ^{***}	1										
.008	-.274 ^{***}	.251 ^{***}	-.254 ^{***}	1									
.027	.141 ^{***}	-.166 ^{***}	.206 ^{***}	-.092 ^{***}	1								
.019	.235 ^{***}	-.176 ^{***}	.124 ^{***}	-.128 ^{***}	.015	1							
-.074 ^{***}	-.051 ^{***}	-.009	-.061 ^{***}	.037 [*]	.005	-.105 ^{***}	1						
-.018	.185 ^{***}	-.160 ^{***}	.087 ^{***}	-.123 ^{***}	.081 ^{***}	.131 ^{***}	-.087 ^{***}	1					
-.016	.185 ^{***}	-.193 ^{***}	.090 ^{***}	-.148 ^{***}	.042 ^{***}	.121 ^{***}	-.092 ^{***}	.336 ^{***}	1				
.015	-.262 ^{***}	.207 ^{***}	-.350 ^{***}	.119 ^{***}	-.163 ^{***}	-.078 ^{***}	-.021	-.024	-.033 [*]	1			
-.034 [*]	.368 ^{***}	-.335 ^{***}	.238 ^{***}	-.166 ^{***}	.087 ^{***}	.104 ^{***}	-.098 ^{***}	.201 ^{***}	.234 ^{***}	-.124 ^{***}	1		
-.006	-.179 ^{***}	.104 ^{***}	-.064 ^{***}	.136 ^{***}	-.013	-.194 ^{***}	.111 ^{***}	-.272 ^{***}	-.243 ^{***}	-.016	-.200 ^{***}	1	
.071 ^{***}	.139 ^{***}	-.046 ^{**}	.074 ^{***}	-.034 [*]	.048 ^{***}	-.055 ^{***}	.046 ^{***}	-.052 ^{***}	-.060 ^{***}	-.074 ^{***}	.047 ^{***}	.112 ^{***}	1

+p< .1, * p < .05, ** p < .01, *** p < .001

제 3절 가설검증

Hetherington(2005)의 ‘물질적 희생이론(material sacrifice theory)’은 정책유형에 따라 비용과 편익의 귀착범위 정도가 달라지는데, 이 때 일정부분 편익보다 비용이 큰 상황에서도 ‘물질적 희생’을 부담하고자 하는 성향은 개인이 가진 정부의 신뢰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복지인식의 하위범주인 ‘정부의 복지책임지지’ 및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를 각각의 결과변수로 하여 2가지 모형을 설정하였다. ‘물질적 희생’과 정부신뢰가 결과변수인 복지인식(정부의 복지책임지지 및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미치는 주효과 및 정부신뢰의 상호작용을 검증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한 가정들을 점검한 결과, 본 연구 모형들은 회귀분석의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점도와 히스토그램을 통해 오차의 등분산성과 정규성을 확인하였으며, Durbin-Watson 통계치는 2에 근접하여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모든 모형의 각 변수의 분산팽창지수(VIF)는 2.5 이하로 확인되어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 모형1: 정부의 복지책임지지

$$\text{모형1: } Y_1 = \alpha_1 + \beta_1 X + \beta_2 W + \beta_3 XW + \gamma_1 D + u_1$$

(Y_1 = 정부의 복지책임지지, X = 물질적 희생, W = 정부신뢰, D = 통제변인, α =상수 u =오차)

우선, 정부의 복지책임지지에 미치는 통제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본 [모형 1-1]의 설명력은 14.2%로 나타났고($\text{Adj.}R^2=.142$),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66.473$, $p<.001$). 연구대상자가 가지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구구성원 특성, 정치성향 및 복지관련 가치관요인은 정부의 복지책임지지의 변량을 14.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의 [모형 1-1]에서 정부의 복지책임지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는 연령($\beta = -.133$, $p < .001$), 교육수준($\beta = -.064$, $p < .01$), 노인가구원 동거여부($\beta = .061$, $p < .01$), 아동가구원 동거여부($\beta = .078$, $p < .001$), 정치성향(보수)($\beta = -.121$, $p < .001$), 분배정의 동의인식($\beta = .074$, $p < .001$), 복지국가 역할에 대한 인식($\beta = -.197$, $p < .001$), 복지수혜자 인식($\beta = -.131$, $p < .001$)이며, 성별, 장애인가구원 동거여부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연령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한 비우호적인 인식을 가졌으며, 정치성향과 관련해서 보수적 정치견해를 가질수록, 국가의 복지책임 강화에 부정적 입장을 가졌다. 복지국가 관련 가치관 요인에서 성장보다는 분배우선주의 입장을 보일수록 정부의 복지책임 강화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으며, 복지확대가 근로동기를 약화시킨다거나, 수급자가 나태하다고 여기는 등 복지국가 역할 및 수급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해 비우호적 태도를 보였다.

물질적 희생이 정부의 복지책임지지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각종 통제변수와 물질적 희생을 투입한 [모형 1-2]을 설정하였다. [모형 1-2]의 설명력은 14.4%로 나타났고($\text{Adj.}R^2 = .144$),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 = 61.608$, $p < .001$), [모형 1-1]에 비해 설명력이 0.2%p 증가하였다. 물질적 희생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구구성원 특성 정치성향 및 복지관련 가치관 요인은 결과변수인 정부의 복지책임지지의 변량을 14.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의 [모형 1-2]에서 ‘물질적 희생’은 정부의 복지책임지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beta = -.053$, $p < .01$). 즉, 물질적 희생이 증가할수록 정부의 복지공급책임에 대해 비우호적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연구가설 1-1]은 지지되었다.

정부신뢰의 주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물질적 희생과 각종 통제변인을 투입한 상황에서 정부신뢰가 정부의 복지책임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표 8]의 [모형 1-3]을 살펴보았다. [모형 1-3]의 설명력은 15.0%로 나타났고($\text{Adj.}R^2 = .150$),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 = 59.063$, $p < .001$), [모형 1-2]에 비해 설명력이 0.6%p 증가하였

다. 물질적 희생, 정부신뢰, 인구사회학적특성, 가구구성원특성, 정치성향 및 복지관련 가치관요인은 결과변수인 정부의 복지책임지지의 변량을 15.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1-3]에서 정부신뢰는 정부의 복지책임지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beta = -.084$, $p < .001$). 이는 정부신뢰가 증가할수록 정부의 복지책임지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2-1]을 기각하는 것으로, 정부역할에 대한 기능적 신뢰가 낮아질수록 오히려 정부의 복지책임을 더욱 지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다음은 물질적 희생과 정부의 복지책임지지의 영향경로가 정부신뢰에 의해 조절되는지 검증해보기로 한다. 상호작용 검증은 통제변인과 예측변인, 조절변인을 투입한 다음, 상호작용항을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이루어진다.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단계에서 총괄 F 검증(omnibus F test), 즉 수정된 R제곱 변화량이 유의미하다면,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함을 의미한다(frazier et al. 2004).

물질적희생과 정부신뢰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기 이전에, 물질적 희생과 정부신뢰 및 각종 통제변인을 투입하여 정부의 복지책임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표 8]의 [모형 1-3]의 설명력은 15.0%로 나타났다($\text{Adj.}R^2 = .150$),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59.063$, $p < .001$). 물질적 희생과 정부신뢰 상호작용을 투입한 이후의 [표 18]의 [모형 1-4]의 설명력은 15.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text{Adj.}R^2 = .151$, $F = 54.948$, $p < .001$), 유의확률 F 변화량은 .000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기에, 0.1%p의 ΔR^2 (설명력 증가량)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상호작용항의 투입이 종속변수의 변량을 0.1%p 만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과학연구에서 상호작용항의 R제곱 변화량이 대체로 0.01-0.03 사이에 있다는 보고(Whisman & McClelland, 2005)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적은 변량추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어서 개별적인 상호작용항의 유의도를 살펴본 결과, 정부신뢰를 통한 조절효과는 정부복지책임지지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었기

에 ($\beta = .033$, $p < .05$), [연구가설 3-1]은 지지되었다. 요컨대, 물질적 희생은 정부신뢰 수준에 따라 정부의 복지책임지지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8] 모형 1: 정부의 복지책임지지

[모형 1-1]			[모형 1-2]			[모형 1-3]			[모형 1-4]					
변수명			정부의 복지책임지지											
			B	S.E.	β	B	S.E.	β	B	S.E.	β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	.035	.093	.006	.034	.093	.006	.028	.093	.005	.019	.093	.003	
	연령	-.026	.004	-.133***	-.027	.004	-.137***	-.024	.004	-.121***	-.023	.004	-.115***	
	교육수준	-.127	.039	-.064**	-.123	.039	-.062**	-.147	.039	-.073***	-.137	.039	-.069***	
가구 구성원 특성	노인가구원 동거여부	.415	.122	.061***	.314	.126	.046*	.344	.126	.051***	.346	.125	.051***	
	아동가구원 동거여부	.490	.098	.078***	.496	.098	.079***	.476	.098	.076***	.471	.098	.075***	
	장애인가구원 동거여부	.103	.123	.013	.065	.124	.008	.069	.123	.008	.075	.123	.009	
정치 성향 및 가치관 요인	정치성향(보수적)	-.393	.050	-.121***	-.398	.050	-.123***	-.401	.050	-.124***	-.400	.050	-.123***	
	분배정의 통의인식	.295	.060	.074***	.286	.060	.072***	.260	.060	.065***	.257	.060	.064***	
	복지국가 역할에 대한 인식	-.391	.032	-.197***	-.389	.032	-.196***	-.374	.032	-.188***	-.372	.032	-.188***	
	복지 수혜자에 대한 인식	-.407	.049	-.131***	-.406	.049	-.131***	-.375	.050	-.121***	-.375	.050	-.121***	
물질적 회생														
정부신뢰						-.180	.054	-.053**	-.182	.053	-.054**	-.192	.054	-.057***
물질적 회생 X 정부신뢰									-.053	.010	-.084***	-.052	.010	-.082***
상수			28.032				28.106			27.982		27.902		
R ²			.144				.147			.152		.153		
Adjusted R ²			.142				.144			.150		.151		
ΔR^2												.001*		
F			66.473***				61.608***			59.063***		54.948***		

*p < .1, **p < .05, ***p < .01, ****p < .001

2. 모형 2: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

$$\text{모형 2 : } Y_2 = \alpha_2 + \beta_4 X + \beta_5 W + \beta_6 XW + \gamma_2 D + u_2$$

(Y_2 =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 X = 물질적 희생, W = 정부신뢰, D = 통제변인, α =상수, u =오차)

우선,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미치는 통제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본 [모형 2-1]의 설명력은 4.3%로 나타났고($\text{Adj.}R^2=.043$)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8.718$, $p<.001$). 연구대상자가 가지는 인구사회학적특성, 가구구성원특성, 정치성향 및 복지관련 가치관 요인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의 변량을 4.3 %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의 [모형 2-1]에서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는 성별($\beta=.061$, $p<.001$), 연령($\beta=.178$, $p<.001$), 정치성향(보수)($\beta=-.074$, $p<.001$), 분배정의 동의 인식($\beta=.044$, $p<.01$), 복지국가 역할에 대한 인식($\beta=-.078$, $p<.001$), 복지수혜자 인식($\beta=-.066$, $p<.001$)이며, 교육수준, 노인가구원 동거여부, 아동가구원 동거여부, 장애인가구원 동거여부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수준이 높을수록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수용성을 높게 가진다. 정치성향과 관련해서 보수적 정치견해를 가질수록, 복지확대를 위한 재정 부담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복지국가 관련 가치관 요인에서 성장보다는 분배우선주의 입장을 보일수록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 부담에 적극적 입장을 보였으며, 복지확대가 근로동기를 약화시킨다거나, 수급자가 나태하다고 여기는 등 복지국가 역할 및 수급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적 희생이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각종 통제변수와 물질적 희생을 투입한 [모형 2-2]을 설정하였다. [모형 2-2]의 설명력은 4.5%($\text{Adj.}R^2=.045$)로 나타나 [모형 2-1]에 비해 설명력이 0.2%p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F=17.867$, $p<.001$). 물질적 희생과 인구사회학적특성, 가구구성원 특성, 정치성향 및 복지관련 가치관은 결과변수인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의 변량을 4.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의 [모형 2-2]에서 물질적 희생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beta=-.050$, $p<.01$). 즉, 물질적 희생이 증가할수록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 수용의지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연구가설 1-2]은 지지되었다.

정부신뢰의 주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물질적 희생과 각종 통제변인을 투입한 상황에서 정부신뢰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표 9]의 [모형2-3]을 살펴보았다. [모형 2-3]의 설명력은 4.5%로 나타났고(Adj. $R^2=.045$),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6.652$, $p<.001$), [모형 2-2]에 비해 설명력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물질적 희생, 정부신뢰, 인구사회학적특성, 가구구성원특성, 정치성향 및 복지관련 가치관은 결과변수인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 변량을 4.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3]에서 정부신뢰는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beta=.031$, $p<.1$). 이는 정부신뢰가 증가할수록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2-2]을 지지하는 것이다. 정부신뢰는 복지인식을 구성하는 하위 범주(정부의 복지책임지지 및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상반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다음은 물질적 희생과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의 영향경로가 정부신뢰에 의해 조절되는지 검증해보기로 한다. 상호작용 검증은 통제변인과 예측변인, 조절변인을 투입한 다음, 상호작용항을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이루어진다.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단계에서 총괄 F 검증(omnibus F test), 즉 수정된 R제곱 변화량이 유의미하다면,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함을 의미한다(frazier et al. 2004).

물질적 희생과 정부신뢰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기 이전에, 물질적 희

생과 정부신뢰 및 각종 통제변인을 투입하여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 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표 9]의 [모형 2-3]의 설명력은 4.5%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6.652$, $p<.001$). 물질적 희생과 정부신뢰 상호작용을 투입한 이후의 [표 9]의 [모형 2-4]의 설명력은 5.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text{Adj. } R^2=.051$, $F=17.360$, $p<.001$), 유의확률 F 변화량은 .000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기에 0.6%p의 ΔR^2 (설명력 증가량)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상호작용항의 투입이 종속변수의 변량을 0.6%p 만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과학연구에서 상호작용항의 R 제곱 변화량이 대체로 0.01-0.03 사이에 있다는 보고(Whisman & McClelland, 2005)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적은 변량추가라 보기는 어렵다. 이어서 개별적인 상호작용항의 유의도를 살펴본 결과, 정부신뢰를 통한 조절효과는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었기에($\beta=.078$, $p<.001$), [연구가설 3-2]은 지지되었다. 요컨대, 물질적 희생은 정부신뢰 수준에 따라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9] 모형 2: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

변수명		[모형 1-1]			[모형 1-2]			[모형 1-3]			[모형 1-4]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	.188	.049	.061***	.187	.049	.061***	.188	.049	.061***	.178	.049	.058***
	연령	.017	.002	.178***	.017	.002	.175***	.017	.002	.169***	.018	.002	.181***
	교육수준	.018	.020	.018	.020	.020	.020	.024	.021	.024	.036	.021	.036+
가구 구성원 특성	노인가구원 동거여부	-.021	.065	-.006	-.069	.067	-.020	-.074	.067	-.022	-.072	.066	-.021
	아동가구원 동거여부	-.046	.052	-.015	-.043	.052	-.014	-.040	.052	-.013	-.045	.052	-.014
	장애인가구원 동거여부	.113	.065	.028+	.095	.065	.023	.094	.065	.023	.101	.065	.025
정치 상황 및 가치관 요인	정치성향(보수적)	-.120	.026	-.074***	-.122	.026	-.075***	-.121	.026	-.074***	-.120	.026	-.074***
	분배정의 논의인식	.088	.032	.044**	.084	.032	.042**	.089	.032	.044**	.085	.032	.042**
	복지국가 역할에 대한 인식	-.077	.017	-.078***	-.077	.017	-.077***	-.079	.017	-.080***	-.077	.017	-.077***
물질적 회생 정부신뢰	복지 수혜자에 대한 인식	-.102	.026	-.066***	-.102	.026	-.066***	-.107	.026	-.069***	-.107	.026	-.069***
	물질적 회생				-.085	.028	-.050**	-.085	.028	-.050**	-.097	.028	-.057**
	정부신뢰							.010	.005	.031+	.011	.005	.036*
물질적 회생 X 정부신뢰											.026	.005	.078***
	상수		4.348			4.364			4.407			4.314	
	R ²		.045			.047			.048			.054	
Adjusted R ² ΔR^2			.043			.045			.045			.051	
												.006***	
	F		18.718***			17.867***			16.652***			17.360***	

tp<.1,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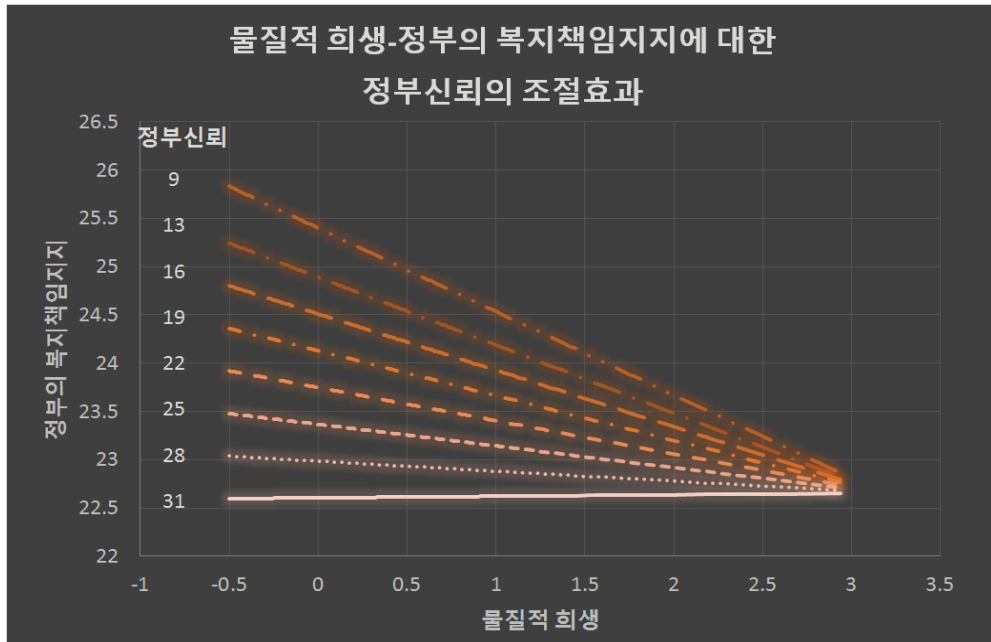
+p< .1,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물질적 희생과 복지인식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정부신뢰의 구체적인 상호작용 양상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그림 2]과 [그림 3]와 같다. 정부신뢰 값의 변화에 따라 물질적 희생이 복지인식¹²⁾에 미치는 영향의 기울기 변화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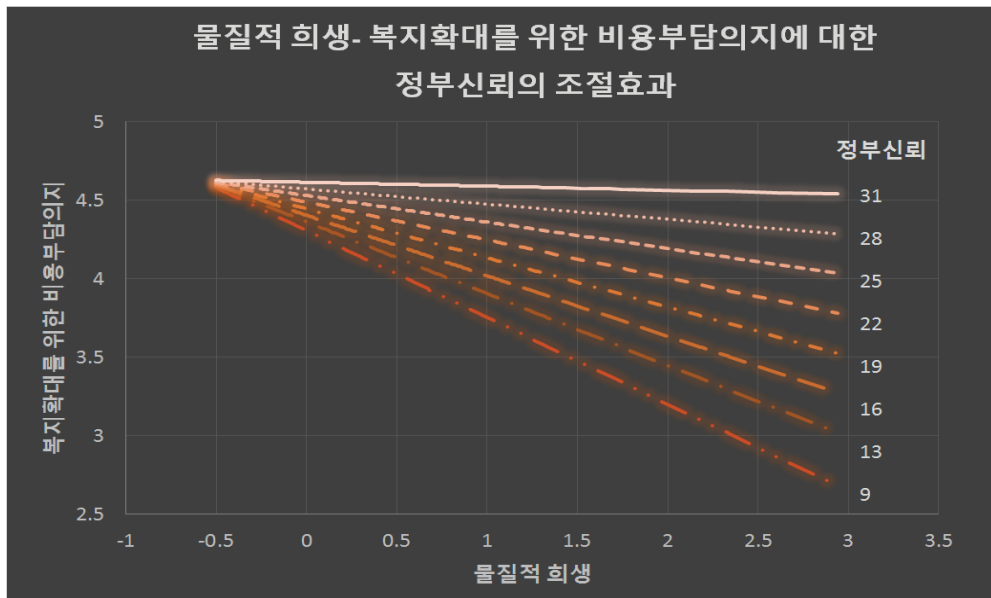
<연구문제 1>에서 검증한 것과 같이 대체적으로 물질적 희생이 커질수록 정부의 복지책임지지 및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복지제도를 둘러싼 개인의 권리와 의무는 복지제도에 대해 가지는 물질적 이해관계를 반영함으로써 복지인식에 차이를 초래할 것이라는 복지지위론(안상훈, 2009)의 설명과 일치한다.

그러나 정부신뢰 수준이 높아질수록 물질적 희생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부(-)적 효과의 기울기 절대값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정부신뢰가 높아질수록 물질적 희생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관계가 다소 완만해지는 것이다. 정부신뢰가 낮을수록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한 지지가 상승하는 [그림 2]의 경우, 고(高)신뢰구간으로 갈수록(그래프 아래쪽) 물질적 희생이 증가할 때 정부에 대한 복지책임지지도가 완만하게 감소한다. 정부신뢰 최대값 구간에서는 오히려 물질적 희생 수준이 증가하더라도 정부에 대한 복지책임지지도 역시 함께 상승하는 정비례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정부신뢰가 높을수록 복지비용부담의지가 높아지는 [그림 3]의 경우에도 고(高)신뢰구간으로 갈수록(그래프 위쪽) 물질적 희생이 증가함에도 복지비용부담의지가 완만하게 감소한다. 즉, 정부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물질적 희생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이는 한 개인이 가지는 비용과 편익의 귀착범위가 달라지는데 일정부분 편익이 비용보다 큰 상황에서도 물질적 희생을 감수하고자 하는 성향은 각 개인이 가진 정부신뢰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 Hetherington(2005)의 ‘물질적 희생이론(material sacrifice theory)’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12) Y축의 복지인식은 각 분석 모형의 선형 회귀식의 추정값이다.



[그림 2] 물질적 희생- 정부의 복지책임지지에 대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



[그림 3] 물질적 희생-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대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

제 5장 결론

제 1절 분석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복지인식의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알려진 복지지위에 주목하며, 한 개인이 다면적으로 점하고 있는 복지수급자-복지납세자 간 지위에서 발생하는 ‘물질적 희생’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경로를 탐색한다. 또한 ‘정부의 복지책임지지’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의 상호결합으로 구체화되는 복지인식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경로에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신뢰가 정치체제에 대한 규범적 판단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일차적 동기로서 설명되었던 자기이해를 거스르는 방향의 정책태도를 표방하게 하는지 검증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라 물질적 희생의 주효과 모형, 정부신뢰의 주효과 모형, 정부신뢰의 상호작용 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분석자료는 2013년 수행된 「한국복지패널 8차년도」에서 「복지인식부가조사」에 응답을 완료한 4,185명 중 가중치를 적용한 4,214명의 응답내용이며, 연구가설의 통계적 검증은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각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격적인 연구문제 검증에 앞서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구구성원 특성, 정치성향 및 복지관련 가치관 요인이 ‘정부의 복지책임지지’ 및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정치성향 및 복지관련 가치관이 정부의 복지책임 확충 및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부담의사에 일관되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구조 내 지위기반을 반영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서는 ‘연령’만이 정부의 복지책임지지 및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그 방향은 비(非)일관적이었다. 잠재적 복지욕구가 있는 가구원 특성(노인, 아동 가구원 등

거여부)은 정부의 복지책임 대한 태도에는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의지까지는 결정짓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복지정책의 주된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가구원과 동거하는 경우, 가구원의 복지에 대한 수요 및 이해를 바탕으로 정부의 복지책임을 지지하는 태도를 가지지만, 이러한 이해관계는 세금증가라는 구체적인 행위의지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다. 요컨대,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지위기반에 따라서는 비(非)일관적이고 모순적인 복지태도가 확인되었지만 자신이 견지하고 있는 정치적 신념과, 가치, 수급자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는 일관된 복지인식이 표출되었다.

둘째, <연구문제 1>은 ‘물질적 희생’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물질적 희생(material sacrifice)’이 증가할수록 ‘정부의 복지책임지지’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의 상호결합으로 구체화되는 복지인식에 비우호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연구가설 1-1]과 [연구가설 1-2]는 모두 지지되었다.

셋째, <연구문제 2>는 정부신뢰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검증한 ‘물질적 희생’ 주효과 모형에 정부신뢰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이다. 연구결과, 사회정책에 있어 ‘기술적으로 유능한 정부 역할수행에 대한 기대’인 기능적 신뢰가 높아질수록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는 정(+)적으로 증가하여 [연구가설 2-2]는 지지되었다. 그러나 사회정책에 대한 정부신뢰는 ‘정부의 복지책임지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쳐 [연구가설 2-1]은 기각되었다. 즉, 정부의 능력에 대한 신뢰 감소가 오히려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한 요구를 견인하고 있었다.

넷째, <연구문제 3>은 ‘물질적 희생’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신뢰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검증을 위하여 물질적 희생, 정부신뢰, 물질적 희생과 정부신뢰 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을 검증한다. 분석결과,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정부의 복지책임지지’에 대한 [모형 1-4]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대한 [모

형 2-4]의 R^2 변화량은 각각 $p<.05$,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상호작용항의 통계적 유의도 역시 각각 $p<.05$,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연구가설 3-1]과 [연구가설 3-2] 모두 지지되어 정부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물질적 희생’이 ‘정부의 복지책임 지지’ 및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의 채택 및 기각 여부를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분석결과 요약

연구문제1. 복지지위가 복지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1-1	복지지위 상의 물질적 희생이 커질수록 정부의 복지책임지지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연구가설 1-2	복지지위 상의 물질적 희생이 커질수록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연구문제 2. 정부신뢰가 복지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2-1	정부신뢰가 높아질수록 정부의 복지책임지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연구가설 2-2	정부신뢰가 높아질수록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연구문제 3. 복지지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정부신뢰 수준에 의해 조절되는가?		
연구가설 3-1	정부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복지지위 상의 물질적 희생이 정부의 복지책임지지에 미치는 부(-)적 영향의 크기가 완화될 것이다.	채택
연구가설 3-2	정부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복지지위 상의 물질적 희생이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미치는 부(-)적 영향의 크기가 완화될 것이다.	채택

제 2절 논의

1. 정부의 복지책임지지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 간 인식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구구성원 특성, 정치성향 및 복지관련 가치관 요인이 ‘정부의 복지책임지지’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보이는 태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치성향 및 복지관련 가치관이 정부의 복지책임 확충 및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부담의사 일관되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적 이념 성향의 개인은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고, 정부의 소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진보적 이념 성향의 개인은 시장실패에 대해 주목하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금현섭·백승주, 2010). 이에 진보의 경우 복지국가강화, 재정규모의 확대, 분배우선주의의 입장을, 보수의 경우 복지국가의 축소, 재정규모의 축소, 성장우선주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현승숙 외 2007; Rudolph et al, 2005).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보수적 이념성향이나 엄격한 노동윤리에 입각하여 복지국가나 수급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질수록 복지욕구 해결을 위한 정부기능 확대와 더불어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표출하였다. 반면, 평등과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고, 분배우선주의적 가치를 선호할수록 복지확대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에 일관적으로 적극성을 보였다.

반면, 사회구조 내 지위기반을 반영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구구성원특성 요인 중에서는 ‘연령’만이 정부의 복지책임지지 및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그 방향성은 비(非)일관적이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한 선호가 약해지는 것은 가족주의 가치관 및 보수주의 가치관이 강한 노인세대의 한국적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연령이 높을수

록 노인의 부양을 가족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개인 책임과 가족 간의 유대를 강조하는 태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직 유교문화의 영향 하에 있는 노인세대의 정치·사회적 보수성이 복지정책에 따른 자기이해에 우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퇴직노인이나 고령자는 복지 의존적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보다 긍정적인 복지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Kluegel & Miyano, 1995; Blekesaune & Quadagno, 2003) 기존 국외 선행연구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유효한 설명력을 가지지 않았다. 반면, 정부의 복지책임을 선호하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으로 실질적 세금부담이 적은 고연령층 일수록 복지재원부담의 적극성을 보이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정치성향의 영향력의 지배하에 있지만, 가족해체 등으로 인한 복지욕구의 증대와 더불어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의 보편적 복지체험의 집중적 확대로 복지재정확충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잠재적 복지욕구가 있는 가구원의 존재는(노인, 아동) 정부의 복지책임 대한 태도에는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의지 까지는 결정짓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즉, 복지정책의 주된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가구원과 동거하는 경우 해당 가구원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수요에 의해 정부의 복지책임을 지지하는 태도를 가지지만, 이러한 이해관계는 세금증가라는 구체적인 행위의지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이는 현재 혹은 미래에 개인적인 이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큰 정책을 선호하고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자기이해에 입각한 선행연구(Pettersen, 2001)가 비용부담의사에는 완벽히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욕구가 수혜로 자동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한국의 취약한 복지구조에서 잠재적 복지욕구를 가진 가구 역시 복지체험부족으로 편익-비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대해 확고하고 일관된 견해를 발전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김은지·안상훈, 2010; 김영순·여유진, 2011).

13) 부(-)적 영향을 미쳤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요컨대,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적 지위기반은 비(非)일관적이고 모순적인 복지태도를 형성하지만, 자신이 견지하고 있는 정치적 신념이나 복지규범 및 가치에 대한 순응성은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한 선호 뿐 아니라 세금증가라는 구체적인 행위의지에 일관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물질적 희생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가 속한 가구단위에서 발생하는 복지부담(조세 및 사회보험료 지출)과 복지혜택(사회보험, 공공부조 급여 및 각종 정부보조금) 간의 차이로 복지지위에서 발생하는 ‘물질적 희생’을 측정하였다. 이 개념을 통해 복지국가를 둘러싼 권리-의무 축을 중심으로 한 개인이 점하고 있는 다면적 복지지위를 단일차원으로 포착하였다. 복지권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사회 전체의 납세 의무를 확산시킨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복지수혜범위 확대와 제도의 성숙을 통해 개인이 미래의 복지수혜자가 될 가능성을 함께 증가시킨다. 국가차원의 정책결정 뿐 아니라 각 개인의 정치적 선택 역시 자신의 물질적 이득을 증진할 수 있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Sears & Citrin, 1982). 이에 각 개인은 복지제도를 둘러싼 개인의 장·단기적 혜택과 부담을 비교·평가하며, 정책 영역과 대상에 있어 자신의 물질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에 대한 지지와 반대 입장을 결정할 것이다. 연구결과, 복지지위에서의 물질적 부담(세금)이 혜택(급여)보다 커지는 ‘물질적 희생’이 증가할수록 정부의 복지책임 및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모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개인이 사회에서 위치하고 있는 복지지위가 내포하는 물질적 이해관계에 상응하는 의식의 분포라고 할 수 있다(Lewin-Epstein et al, 2003). 특히,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복지제도 밖에서 복지납세자로서의 의무만을 지고 있으며, 복지프로그램의 성숙도 또한 낮아 복지권리를 누리는 수급자로서의 확고한 이해관계를 가지기 어렵다. 이러한 한국의 복지현실을 감안하였

을 때, 복지수혜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일방적인 부담에서 발생하는 ‘물질적 희생’은 정부의 복지책임확대 및 재원 확충에 대한 적극적 행동의지를 저해할 것이다. 이에 복지수혜범위 확대와 제도의 성숙을 통해 복지수급자로서 지위를 획득하는 사람의 수를 늘리고, 그러한 지위의 질을 고양하는 것이 친(親)복지태도를 고양하는 전략이 될 수 있겠다(김은지·안상훈, 2010).

3. 정부신뢰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2>에서 사회정책에 있어 ‘기술적으로 유능한 정부의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인 ‘기능적 신뢰’가 높을수록 복지확대에 대한 동의와 순응을 이끌어내기 용이하다는 기존 선행연구의 흐름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만 적용되었다. 공공사회정책 산출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평가는 정부가 정책을 통해 추구하는 목적자체에 대한 인정뿐 아니라 특정문제를 해결할 정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게 한다. 효율적으로 정책결정을 수행할 것이라는 정부역할에 대한 능력과 선의에 대한 신뢰는 복지부담증대에 따른 자기피해 발생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Mayer et al., 1995).

한편, [연구가설 2-1]이 기각된 것은 정부신뢰가 낮아질수록 오히려,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한 지지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의 능력(capacity)에 대한 신뢰 감소가 오히려 정부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견인하기도 한다는 기존 연구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Della Porta, D, 2000). Craig & Gainous & Martinez(2006)의 연구에서도 행정의 효율성, 당위성에 대한 정부신뢰와 의료, 실업, 아동, 노인, 빈곤 등의 제반복지영역에서의 정부책임간의 부(-)적인 관련성을 탐색한 바 있다. 이성균(2002)의 연구에서는 불평등인식이 강할수록 빈곤층을 대상으로 국가의 복지책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한나 & 이미라(2010)의 연구에서도 소득분배 형평성 수준과 세금부담 형평성 수준을 낮게 지각할수록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국가책임이 보다 크다

고 여기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이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강혜진(2011)의 복지영역을 중심으로 한 정부역할태도 연구에서도 정부신뢰가 낮을수록 복지영역에서의 정부역할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신뢰가 낮다는 것은 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을 가능성을 내포하지만, 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 정부의 사회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가질수록 현실 개선을 위해 오히려 정부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현 정부의 공공정책 산출 및 성과에 대해서는 낮은 신뢰를 보이면서도, 정부의 복지공급책임의 확대를 요구하는 일면 ‘비(非)일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Hyman&Sheatsley(1965)는 이러한 비(非)일관적인 태도의 원천을 ‘건강한 비판주의(healthy skepticism)’에서 찾았으며, 이를 정부성과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비판적인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오히려 정부 역할을 기대하는 일련의 성향이라 해석하고 있다. 특정 공공정책 영역에서의 산출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은 경우, 심리적 실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당 정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하게 주문하는 ‘건강한 비판주의(healthy skepticism)’의 발현이 가능하다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한 비판주의(healthy skepticism)’의 영향은 ‘정부의 복지책임지지’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일관된 방향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사회정책에 대한 정부역할신뢰가 낮을수록 국가의 복지책임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동의의 경우에는 정부신뢰가 높을수록 복지에 대한 비용부담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복지책임 면에서는 국가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지만, 복지실천과 관련된 비용부담 측면에서는 매우 소극적인 한국인의 복지인식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김영순·여유진, 2011). 사회정책의 정부역할에 대한 기능적 신뢰가 낮을수록, 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을 가능성을 내포하기에 국가의 주도적 복지 역할을 강조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의 주도적 역할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비용부담의 경우, 효율적으로 해당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어야만 ‘물질적 희생’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를 수용하는 의사결정에 찬성하는 것이다. 기존 선행연구(최균·류진석, 2000; 이한나·이미라, 2010; 김영순·여유진, 2011)에서 한국인의 복지인식의 이러한 특성을 이중성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이는 빈곤원인에 대해서는 개인주의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등현실에 대해서는 집합주의적 가치를 수용하는 경향, 복지에산확대에 동의하고 복지시행에서 국가책임지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이를 위한 세금납부에는 반대하는 모습 등 인식과 실천의지에서 불일치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면 비(非)일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정부의 기능적 신뢰의 영향은 복지부담을 둘러싼 자기이해관계차원에서 보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복지확대로 인한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감당하는 정치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부담하는 복지에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된다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본 연구결과는 사회정책 산출물에 대한 기능적 신뢰가 낮은 경우 국가의 복지책임에 대해 추가적인 역할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수용의사를 가지기 위해서는 사회정책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할 것이라는 기대 혹은 믿음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4. 물질적 희생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

‘물질적 희생’이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부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물질적 희생’이 ‘정부의 복지책임지지’ 및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하였고, 이는 Hetherington(2005)의 ‘물질적 희생이론(material sacrifice theory)’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현재적인 복지 편익이나 잠재적 수혜가능성이 동반되지 않은 일방적 복지비용의 증가는 복지납세자의 물질적 희생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복지확충 및 비용부담의사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물질적 희생을 경험하는 집단 중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신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자신의 물질적 이해를 다소 거스르는 방향의 정책인식을 보여주었다. 이에 국민들의 복지인식을 분석할 때, 국민 개개인이 반드시 합리적 행위자로서 자신의 물질적 이득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가정(Sears & Citrin, 1982)은 완벽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완벽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합리적 개인을 상정할 수 없고, 자기이해에 입각한 정책태도 역시 정부에 대한 평가정향에 의해 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Nagayoshi & Sato(2014)는 복지인식은 자기이해에 입각한 합리적 선택 관점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능력에 대한 제도적 신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즉, 해당 정책으로부터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집단일지라도 정부가 해당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고 여기면, 재분배 정책의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Rothstein(1998) 역시 재분배 정책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주체인 정부에 대한 신뢰가 동반되지 않으면, 복지레짐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기에, 국민들의 신념체계나 평가로부터 정책의 순응을 확보해낼 수 있는 접근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결과적으로 정부신뢰와 권리-의무 간 복지지위와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동태적 관계는 복지 지지 및 반대 수준을 조절할 것이다. 이에 복지증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물질적 비용(세금 및 사회보험료지출)이 물질적 편익(급여 및 서비스)에 비해 큰 상황에서 ‘물질적 희생’을 감수하게 하는 정부신뢰의 증진이 절실하다.

제 3절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들의 복지지위에서 발생하는 부담-혜택을 단일차원으로 통합적인 측정을 시도하였다. 복지인식 형성에 있어 ‘복지혜택’과 ‘복지부담’의 역할을 강조한 기존의 실증연구들은 복지제도와 결부된 물질적 이해관계에 따라 개인의 복지인식과 정치적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을 가정한다(Gelissen, 2002). 특히 복지수급자로서 발생하는 물질적 편익과 납세자로서 부과되는 비용 변수를 각각 투입함으로써 그 개별적인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주로 복지제도를 통해 얻는 권리는 복지프로그램 수급여부, 구체적으로 본인 및 가구원이 이용하는 공공복지프로그램의 숫자 및 이용 빈도, 소득에서 공적이전이 차지하는 비율인 공적소득대체율 등을 통해 측정되었고(김사현, 2012; 주은선·백정미, 2007; 신자은, 2009; 안상훈, 2000 ; 안상훈 외 2013 ; Orschot, 1999; Stipak, 1979; Sims, 2001), 대체적으로 복지수급자로서의 얻는 양질의 물질적 혜택이 증가할수록 자기이해관계에 기초하여 긍정적인 복지태도를 보임이 확인되었다. 한편, 복지제도를 통해 발생하는 부담은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세금의 대리지표로 기능하는 개인과 가구의 총소득, 재산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치 등을 통해 측정되었으며(안상훈, 2000; 안상훈, 2009; 안상훈·정해식, 2010; 신자은, 2009; 백화종·우해봉, 2009; 이훈희 외 2011), 복지납세자로서 부담정도가 높을수록 복지에 대한 지지성향이 낮아졌다.

복지지위에서 발생하는 혜택과 부담의 변수를 각각 투입하는 접근을 통해 한 개인이 점하고 있는 복지수급자, 납세자로서의 다차원적 지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개별적인 영향력을 검증할 수 있었으나, 한 개인이 아울러 점하고 있는 다면적적인 복지지위간의 동태적 관계를 동시에 포착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주로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초하는 복지

지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복지확대로 납세의 부담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복제제도를 통해 얻는 혜택이 동반되면, 물질적 이해관계에 따른 개인의 복지인식 및 정치적 선택은 다소 상이하게 표출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개인을 복지제도를 둘러싼 개인적 편익과 비용을 비교·판단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합리적 행위자로 상정하였다. 한 개인이 아울러 점하는 복지지위를 단일차원으로 측정하기 위해 조사대상자가 속한 가구단위에서 발생하는 복지부담(조세 및 사회보험료 지출)과 복지혜택(사회보험, 공공부조 급여 및 각종 정부보조금) 간의 차이로 복지지위에서 발생하는 ‘물질적 희생’을 정의하였으며, 부담이 혜택보다 큰 경우 ‘물질적 희생’이 발생한다고 이해한다. 이 개념을 통해 복지제도와 결부되어 한 개인이 점하는 물질적 이해관계를 통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었고, 분석결과 혜택에 비해 과도하게 주어지는 부담은 정부의 복지책임 및 복지재원부담에 있어 비우호적인 태도를 형성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친(親)복지인식의 확대를 위해서는 복지수혜범위 확대와 제도의 성숙을 통해 복지수급자로서 지위를 획득하는 사람의 수를 늘리고, 그러한 지위의 질을 고양하여 복지혜택과 부담 간의 물질적 이해관계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둘째,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적 요인으로서 정부신뢰 변수에 주목하였다. 복지인식 영향요인의 기존 경험적 흐름 가운데 가치지향 및 규범을 강조하는 연구(Andress & Heinen, 2001; Blekesaune & Quadagno, 2003; 이중섭, 2009; 이아름)는 개인 행위 동기로써 각 개인이 유지해온 정치적 신념, 이념적 성향 및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가치관의 영향력에 주목한다. 특히 바람직한 사회상에 대한 가치지향으로 복지에 대한 규범적 순응성이 높거나 평등주의적 분배정의에 동의할수록 복지친화적 태도를 가짐이 확인되었다. 한편, 가치관 및 정치성향에 근거하여 상징적 태도요인을 검증한 기존 복지태도 연구들이 복지인식 결정요인으로서 정치적 성향, 정당 소속감등의 변수에 일관되게 주목한 반면,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가지는 있는 평가적 정향(Hetherington,

1998)으로서 정치적 태도의 일종인 정부신뢰의 영향력을 규명하는데는 다소 소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신뢰를 정부정책에 대한 태도, 선호,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적 요인으로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기존 복지인식의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특히 정부신뢰 하락이 통치체제의 정당성을 위협하고, 물적, 인적 자원 제공에 대한 저항으로 정치체제를 장기적으로 불안하게 한다는 정부신뢰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Miller, 1974). 이를 위해 정부신뢰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주효과 뿐 아니라, ‘물질적 희생’이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고, 정부신뢰가 복지정치과정에서 왜 중요한지, 특히 ‘정부의 복지책임 지지’ 및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어떤 영향관계를 가지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2.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정부신뢰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주효과 뿐 아니라, ‘물질적 희생’이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정부신뢰 수준이 높은 경우 ‘물질적 희생’을 감수하며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신뢰의 제고가 정치체제의 안정을 위해 규범적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지에 대한 개인의 태도 및 행위 동기로서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성공적인 정책수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1) 친(親)복지인식 확대를 위한 정부신뢰의 중요성

첫째, 복지인식 형성에 있어 정부신뢰 효과를 밝히는 것은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확대 뿐 아니라, 정부정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물질적 희생’을 경험하는 집단 중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신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자신의 물질적 이해를 다소 거스르는 방향의 정책인식을 보여주었다. 국민 개개인이 합리적 행위자로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파악하여 각자의 물질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가정(Sears & Citrin, 1982)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물질적 이해를 다소 거스르는 정책결정에 대한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 대한 신념체계나 정부기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Mayer et al.(1995)는 정부신뢰를 ‘정부를 감시 또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는 상관없이, 국민이 정부로 인해 피해를 볼지도 모르는 데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며 정부를 지지하는 태도’라고 정의한바 있다. Mayer et al.(1995)의 정부신뢰 정의는 ‘정부에 대한 기대’, ‘그 기대에 입각한 피해인지’, ‘정부의 능력과 선의에 대한 믿음과 순응’이라는 요소들을 내포한다. 본 연구에서는 ‘물질적 희생’을 다소 거스르는 복지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정부의 능력과 선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입각하여 피해를 감수하는 정책순응을 확인한 바 있다. 즉, 공공사회정책기구인 정부에 대한 기능적 신뢰가 확보된 경우, ‘물질적 희생’을 감수하는 복지인식을 보였으며, 이는 정부신뢰의 확충이 규범적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책과정에서 성공적인 정책수행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의미한다.

둘째, 정부신뢰가 복지인식의 하위범주인 ‘정부의 복지책임지지’ 및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지지’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정부가 운용하는 사회정책에 대한 낮은 기능적 신뢰가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한 역할을 견인하는 ‘건강한 비관주의(healthy skepticism)’가 작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책임 있는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민들의 정부 기능에 대한 축적된 실망은 ‘수동적 비관주의(passive negativism)’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Craig et. al, 2006). ‘수동적 비관주의(passive negativism)’는 정부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막고 정치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하기에(Craig et. al, 2006),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유능한 정부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친(親)복지태도 확대를 위한 개입의 초점으로 ‘건강한 비관주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공공정책 산출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정부의 동력에 대한 신뢰는 잃지 않은 일련의 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정책에 대한 정부 역할기대에 대응하는 노력을 통해 복지확대를 위한 국민적 동의의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중세 이전에 복지확대를 위해 필요한 중요한 전제는 세금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기반 한다는 점이다. 사회정책에 대한 기능적 신뢰가 낮을수록 국가의 복지책임확대를 요구하였던 것과 달리, 정부의 사회정책 성과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복지에 대한 비용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부의 복지책임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재원부담 의지를 고양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낸 세금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며, 장기적 관점에서 복지급여로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회적

믿음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윤홍식, 2011; 이현우, 2013). 따라서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여부와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책에 대한 기능적 신뢰를 확보하여 국민들의 복지비용부담에 대한 수용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단순히 신뢰수준에 대한 당위적 차원의 논의를 넘어 각종 사회정책 산출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 정부신뢰 증진을 위한 노력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잘 운용되고 있는 지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 정향’ (Hetherington, 1998)으로 정부신뢰를 정의한 후, 구체적으로 ‘정부의 사회정책 산출물에 대한 국민의 주관적인 평가’로 이를 측정하였다. 한국 복지정치맥락에서 사회정책에 대한 기능적 신뢰는 단순히 국민들의 규범적 판단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물질적 이익을 거스르면서도 ‘물질적 희생’을 감수하는 방향으로 정책태도를 표방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었다. 이에 복지지출 확대에 의한 ‘물질적 희생’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세부담을 수용하도록 위해서는 복지예산의 공정하며 효율적인 집행에 대한 구체적 믿음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 기능적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첫째, 보편적 복지급여의 확대를 통해 국민 일반의 복지체감도를 높여 공공정책에 대한 동의와 순응을 이끌어내야 한다. 2000년대 이후 급속한 고령화, 심각한 저출산 현상, 경제위기의 장기적 여파로 인한 장기실업 등의 문제로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었고, 그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도 가파르다. 이에 2013년 국가예산 342조 5천억 중 복지예산은 97조 5천억원(28.3%)에 이르고, 16개 중앙 부처에서 292개의 복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등 보편적 복지정책의 확대에 전체 복지대상자 규모 역시 2006년 400만 명에서 2013년 1000만 명을 상회하도록 증가하였으나, 국민들의 ‘복지체감도’ 및 ‘복지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권기창, 2013).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에 진입했지만, 절반이 넘는 재원은 가입자의 기여와 급여에 토대를 두는 사회보험제도에 할당되는 형국이며, 취약계층 및 국민일반의 복지체감과 관련되는 공공부조 및 노인, 장애인, 가족,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 지출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한 나라의 복지급여가 선별주의를 표방하는 잔여적 복지국가에서는 복지수급자와 납세자를 철저히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다. 자산조사에 근거한 복지급여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복지수급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수혜자는 납세자의 기여로 살아간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수혜자와 납세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분리시킨다(Nagayoshi & Sato, 2014). 이러한 맥락에서 Edlund(1999)는 복지정책의 구조(design)과 범위(scope)가 복지국가의 정당성을 결정짓는다고 주장하면서, 복지수혜범위 확대를 통해 제도에 대한 경험기회를 부여하여야만 복지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였다. Rothstein & Uslaner(2005)의 연구에서도 유럽국가의 경우 대체로 보편적 복지정책이 국민들에게 인기가 많고 정책에 대한 만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신뢰가 높게 나타나는 한편, 미국에서 시행되는 선별적 복지정책이 유럽에 적용될 경우 정부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사회정책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해서는 복지수혜의 범위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의 경험이 일천한 한국 복지지형에서 부분적이라도 복지수급경험을 가지게 하여 정부의 공공정책 산출에 대해 긍정적 평가 및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기능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사회정책에 대한 정책수혜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광범위한 정부의 대응노력은 복지대상자의 점진적인 확대로 이어져, 장기적 관점에서 조세부담이 본인에게 복지급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회적 믿음을 형성하고 복지 제도 일반에 대한 신뢰구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시민들에게 공공사회정책집행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Winter, S & P. Mouritzen(2001)의 ‘재정환상

이론(fiscal illusion theory)’에서는 공공서비스로부터의 물질적 이익을 향유하는 수급자(이용자)와는 달리 비용만을 부담하는 납세자는 행정을 집행하기 위한 비용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즉, 보통 납세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확보된 예산의 비용집행에 대한 비효율적 인식을 가지기에, 정책집행 및 운용에 있어 일반적인 납세자(ordinary taxpayers)의 동의와 순응을 이끌어 내는 것(mobilize)이 어렵다고 보았다. Rainey(1997) 역시 대중들이 사회보장부서의 행정비용(administrative cost)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혀내면서, 대중은 종종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정부성과에 대한 편향된 인식(biased perception)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구결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현재 지출수준과 단위비용(unit cost), 이용인원, 이용료 등의 정보를 시민에게 직접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도를 통해 납세자들이 가지는 행정비용에 대한 과대평가(fiscal illusion)나 지출확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었다. 정보제공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이용자보다는 납세자에게 더욱 유의미하게 나타났다으며, 정보를 제공 받은 납세자에게서 자기이해를 다소 거스르는 지출 선호(spending preference)가 발견되었다(Winter, S & P. Mouritzen, 2001). 즉, 대중과 정부 간 존재하는 정보격차의 해소노력은 정보를 매개로 한 심리적 친밀성을 증진시키며, 더불어 정부성과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수정하고,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한다(Mutz & Flemming, 1999; Welch, W et al, 2005).

최근 대중과 정부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보공개청구뿐만 아니라 청구 이전의 적극적 공유를 강화하는 정부3.0이 정부운영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정부3.0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핵심가치로 삼고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라는 3개 전략 아래 각각의 추진과제를 실행하고 있다. 이 중 원활한 공공정보활용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위해 공공정보 적극공개, 결재문서 즉시공개, 공공정보 접근확대 등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

다. 이러한 변화들은 기존의 일방향적 정보 흐름을 뛰어넘어 쌍방향의 소통을 기반으로 공공정보의 생산, 공유, 참여 등이 가능한 정부를 구현하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플랫폼을 만들고, 그 안에 시민의 적극적 개입을 허용함으로써 시민들 단순한 정보의 소비자가 아닌 정보의 재생산과 재활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정진임·김유승, 2014).

‘투명한 정부’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으로 최근 국가·지방의 세입·세출 예산 운용 상황 등의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열린재정정보공개시스템」 서비스가 개시되었고, ‘세금,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라는 국민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각 세목별 재정정보를 알기 쉽게 시각화하여 공개하고 있다. 특히 해당 시스템에서 사회복지분야 부분별¹⁴⁾ 예·결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 플랫폼을 통해서는 각 정책이 사회복지분야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집행액 등의 기초적인 통계자료만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유사하게 「국가통계포털」에서도 보건·사회·복지 관련한 주제별 통계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상자수, 지급건수, 급여액, 이용액, 프로그램 수와 같이 행정적이고 실적 현황에 해당하는 통계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현황 중심의 정보들로는 해당 정책의 수급(이용)인원 당 투입되는 행정비용, 수급자(이용자)들의 욕구 해결수준, 해당정책을 통한 복지 및 고용증진효과 등 수급자와 비수급자(정부 또는 납세자)의 비용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사회전체의 순편익(net benefit)을 보여주기에 제한적이다. 즉,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업현황 중심의 행정통계를 공개하는 차원을 넘어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본인이 낸 세금이 복지 분야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복지제도를 둘러싼 비용부담이 사회적 편익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시하여 복지제도에 대한 사회적 믿음을 구축

14) 노령·유족연금 등 공적연금, 임대·전세지원 등 주택시장 안정, 산재보험·고용노동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노인·청소년, 보육·가족 및 여성, 보훈, 취약계층지원, 사회복지일반 등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컨대, 복지제도를 통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나 경험을 가지지 못한 집단은 제한된 정보 속에서 언론 등 외부에서 주입된 정보를 단순히 수용하는 방식으로 복지태도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 해당정책으로부터 직접적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집단일지라도, 정부가 사회정책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여, 정책내용이 포괄해야 할 규범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재분배정책의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에 시민들에게 공공사회정책집행의 절차, 과정, 결과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직접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정부가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신뢰의 회복과 함께,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지지하는 유인 및 우호적 복지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 4절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한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8차년도」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대상자가 속한 가구단위에서 발생하는 복지제도 일반을 둘러싼 부담-혜택 간의 격차로 ‘물질적 희생’을 측정하였다. 복지혜택은 응답자 가구의 월평균 사회보장급여액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복지부담은 응답자 가구의 월평균 조세 및 사회보장부담금의 합으로 측정하였다. 이때, 복지혜택의 경우 조사지도원들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지역의 패널 가구들에 대한 조사협조를 부탁하고, 공공부조 수급액, 사회수당(social allowance) 성격의 인구학적급여(demogrants), 취약계층보조금, 기타보조금 수급액 등의 자료를 직접 확인하여 실제 응답자 가구에서 누리는 사회보장급여의 혜택을 정확하게 측정하였다. 반면, 납세액, 사회보험료 지출액의 합으로 측정되는 복지부담액의 경우 응답자 개인보고에 의존하여, 응답자 가구에서 실제 지출되는 부담액을 완벽히 반영하는 신뢰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통계청의 가계조사 결과와 80% 내외로 차이를 보이는 국내 타 패널조사와는 달리, 조사된 소득 및 지출수준이 통계청의 가계조사의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점을 감안하면(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측정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해당부처의 협조를 얻어 복지혜택과 더불어 복지부담수준에 대한 정보연계가 가능하다면,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한 개인이 접하는 다면적 복지지위 및 ‘물질적 희생’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주목한 정부신뢰는 사회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는 ‘기능적 신뢰’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연구에서 정부신뢰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태도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대체로 동의하나, 그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차원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정부신뢰를 경험적으로 측정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신뢰수준을 단일차원으로 측정하거나, 정부의 능력(기능적 신뢰)과 윤리적 책임(윤리적 신뢰)에 대한 구성개념(construct)의 합인 다차원적인 지표를 사용하였다. 특히, 전문성, 능률성, 공정성, 투명성 등과 같은 측정요소들을 활용하여 통합적인 신뢰수준을 측정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의 한계로 ‘사회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인 기능적 신뢰를 기존의 정부신뢰와 동등한 개념으로 규정하여 개념의 타당성이 다소 저해되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사회정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정부역량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공공의 이익에 따라 사회정책을 결정, 집행할 것이라는 정부 선의에 대한 믿음, 즉 ‘윤리적 신뢰’가 각각 복지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정책을 운영하는 신뢰대상의 속성(attributes) 중 물질적 희생-복지인식의 경로를 조절하는 핵심적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전문성, 대응성, 능률성, 효과성, 투명성, 공정성 등의 측정요소 각각의 영향력의 검증이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 더 나아가 사회정책이 아닌 공공정책 일반에 대한 기능적 신뢰 및 윤리적 신뢰, 정치, 경제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친(親)복지인식을 견인하는 정부신뢰의 다양한 속성에 대한 구체적인 제언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의 복지인식은 사회구성원 전체가 복지제도의 일반화된 목적들에 얼마나 동의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각종 사회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정도 및 정부의 일반적인 복지지출에 대한 동의수준을 측정하였다. 이로 인해 복지국가 전반에 대한 가치, 태도, 행동지향 등을 포착할 수 있었으나, 정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물질적 희생, 정부신뢰와 각 정책지지 간의 영향관계를 밝히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실제로 복지정책은 수급집단의 범위별로 보편적인 정책과 선별적인 정책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에 따른 복지지지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 노인 등 사회보험 형태와 돌봄, 교육과 같이 중산층의 보

편적 이해에 기반 한 정책은 사회적 지지도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실업 지원, 공공부조와 같이 선별적이고 주변부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지지도는 대체로 낮은 편이다(Rothstrein, 2001). 구체적인 정책분야에서 각 개인은 서로 다른 위험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정치적 이해관계의 균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박찬웅외, 2014).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정책 유형별로 복지지위 상의 부담-혜택 간 격차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 그 영향경로에서의 정부신뢰의 조절관계를 동시에 분석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혜진. (2011).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석사 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
- 권기창. (2013). 사회복지의 지역수준 공공전달체계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13(4), 1-19.
- 권영모. (1993). 연구논문: 납세자의 조세형평성 인식에 관한 연구-개인소득세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5(단일호), 95-124.
- 고호태. (2012).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효과성 연구. *노인복지연구*, 58(단일호), 61-87.
- 금현섭 · 백승주. (2010). 정치적 이념, 정부신뢰 그리고 정책지지. *행정논총*, 48(4): 201-228.
- 김사현. (2012). 노인복지서비스 수급경험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효과: 성향점수매칭 (PSM) 을 활용한 이중차이분석. *한국사회정책*, 19(1), 9-38.
- 김사현 · 홍경준. (2010). 잠재집단분석방법을 통한 서울시민의 복지태도 연구. *사회복지정책*, 37(2), 95-121.
- 김성욱. (2012). 복지지출의 사회적 공급형태와 조세구조의 체계적 대응. *한국사회정책*, 19(4), 251-283.
- 김신영. (2010). 연구논문: 한국인의 복지의식 결정요인 연구: 국가의 공적책임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11(1), 87-105.
- 김영순 · 여유진. (2011). 한국인의 복지태도. *경제와사회*, 211-240.
- 김은지 · 안상훈. (2010). 한국 복지정치의 젠더메커니즘: 태도의 성별차이와 복지지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1(2), 309-334.
- 김태성. (2007). *두 개의 예외적인 복지체제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태성 · 성경룡. (2009). *복지국가론*. 나남.

- 김현구 · 이승중 · 최도림. (2009). 정부신뢰의 지표체계 개발 및 적용: 외부신뢰와 내부신뢰의 비교분석. *행정논총*, 47(3).
- 김홍배. (2000). *비용편익분석론*. 서울: 홍문사.
- 김희진 · 전희정. (2010). 일반 국민들의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미치는 영향변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복지욕구, 복지인식 및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6(2), 95-121.
- 노법래. (2012). 정책 태도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정책에서의 국가 책무성과 보편성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0(4), 1-21.
- 박미옥. (2005).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주민의식 분석: 이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4(1), 153-193.
- 박병진. (2007). 신뢰형성에 있어 사회참여와 제도의 역할. *한국사회학*, 41(3), 65-105.
- 박순애. (2006). 정부에 대한 이해와 정부 신뢰의 관계. *한국행정학보*, 40(2), 73-97.
- 박정훈. (2008). 정부신뢰와 정책수용: 전자주민카드 정책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6(1).
- 박정훈 · 신정희. (2010). 정부신뢰, 정책효능성, 정책지지간의 연관성 실증연구: 주거지역내 CCTV 설치 정책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8(3).
- 박종민 · 배정현. (2011). 정부신뢰의 원인: 정책결과, 과정 및 산출. *정부학연구*, 17(2), 117-143.
- 박찬용. (2002). 소득분배와 빈곤 동향 및 변화요인 분석.
- 박찬용, 정동철, 조선미, & 김노을. (2014). 복지인식의 사회적 배태성: 영역별 국가의 복지책임지지 요인에 대한 다수준분석. *사회보장연구*, 30(1), 105-141.
- 박통희. (1999). 신뢰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재구성. *한국행정학보*, 33(2), 1-17.
- 박희봉 · 이희창 · 조연상. (2003). 우리나라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 요

- 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37(3), 45-66.
- 배병렬. (2007). 구조방정식모델 이해와 활용. *서울: 대경*.
- 배정현. (2013). 시민의 정부에 대한 평가와 태도. *한국행정논집*, 25(4), 1329-1343.
- 백정미 외. (2008). 복지인식 구조의 국가간 비교: 사민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복지국가와 한국. *사회복지연구*, 37(2): 319-344.
- 백화중 · 우해봉(2009).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의 특성과 결정요인. *사회보장연구*, 25(4): 161-186
- 서한석. (2014). 국제사회: 사회적 신뢰와 큰 정부: 무엇이 복지국가를 지지하는가?. *국제지역연구*, 18(1), 507-531.
- 신자은. (2009). 건강보험제도 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구 보건경제연구)*, 15(2), 21-44.
- 손호중 · 채원호. (2005).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9(3), 87-113.
- 신자은. (2009). 건강보험제도 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5(2), 21-44.
- 안상훈. (2000). 복지정치의 메커니즘과 비계급적 균열구조 : 복지권과 복지의무에 기초한 세 가지 지위차원의 이론적 · 경험적 검토. *사회복지연구*, 16(1): 87-115
- 안상훈. (2009). 한국의 친복지태도 결정요인과 그 경로구조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정책*, 16(1), 163-192.
- 안상훈 · 정해식. (2010). 복지지위와 사회의 질.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059-1076.
- 안상훈 · 박종연 · 김수완(2013). 주거 관련 물질적 이해관계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 주거지위와 연관된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0(4). 375-398
- 안치민. (1995).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과 계급. *사회와 문화*, 9(10): 211-227.
- 오경민 · 박홍식. (2002). 일반논문: 정부신뢰 수준의 측정과 비교에 관

- 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1(3), 113-137.
- 윤석명. (2007).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방향. *보건복지포럼*, 45-57.
- 윤홍식. (2011). 복지국가의 조세체계와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63(4), 277-299.
- 이상은 · 권혁창 · 전세나. (2010). 한국 자활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연구. *사회복지연구*, 41(3), 299-326.
- 이성균. (2002). 한국사회 복지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36(2), 205-228.
- 이아름. (2010). 한국인의 복지의식 특성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34-264.
- 이양수. (2008). 신뢰유형, 관료의 형태, 국정운영평가가 정부역할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논집*, 20(2), 533-553.
- 이중수. (2001). 논문: 정부에 대한 신뢰와 그 결정요인. *사회과학논집*, 32(단일호), 67-86.
- 이중섭. (200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6(4), 73-99.
- 이한나 · 이미라. (2010). 한국인의 복지태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0(2), 254-286.
- 이현우. (2013). 복지예산 규모에 대한 태도결정에 미치는 요인분석. *국제정치논총*, 53(2), 249-280.
- 이현주 · 노대명 · 오미애. (2013). *2013 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훈희 · 김윤태 · 이원지. (2011). 한국의 복지태도와 건강보험 인식의 결정요인. *사회보장연구*, 27(2), 1-25.
- 임고운빛. (2013). 복지태도와 복지의 상대적 중요성 인식에 관한 연구: 정부신뢰와 정부공정성인식의 조절효과에 대하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 전병목. (2007). 정책분석 2: 공적연금제도와 재정주계. *보건복지포럼*

- 134 : 46-55.
- 조돈문. (2001). 복지인식의 계급효과와 공사부문 효과. *산업노동연구*. 7(1): 11-41
- 정광호. (2011). *정부신뢰*. 법문사
- 정진임 · 김유승. (2014). 정부 3.0 시대, 정보공개시스템의 개선 과제. *기록학연구*, (39), 45-72.
- 주은선 · 백정미. (2007). 한국의 복지인식 지형: 계층, 복지수요, 공공복지 수급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4(1). 203-225.
- 최균 · 류진석(2000). 복지인식의 경향과 특성. *사회복지연구*. 16(1): 223-25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2014 년 보건 · 복지 예산안의 구조와 쟁점. *보건복지 이슈애포커스*. 212.
- 현승숙 · 이승중. (2007). 주민접촉에 따른 지방정부신뢰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4), 93-112.
- Andreß, H. J., &Heien, T. (2001). Four worlds of welfare state attitudes? A comparison of Germany, Norway, and the United Stat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7(4), 337-356.
- Ahn, S. H. (2000). Pro-welfare politics: A model for changes in European welfare states.
- Barber, B. (1983). *The logic and limits of trust* (Vol. 96).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Berger, J & Ullrich, C. G. (2009). The acceptance of the welfare state.
- Blekesaune, M., &Quadagno, J. (2003). Public attitudes toward welfare state policies a comparative analysis of 24 nation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9(5), 415-427.

- Bonoli G., George V. & Taylor-Gooby P. (2000). *European welfare Future: Towards a theory of retrenchment*. Oxford : Policy Press. 최중균(역). 2005. 「유럽복지국가의 미래」 서울: 인간과 복지.
- Boss, R. W. (1978). Trust and managerial problem solving revisited. *Group & Organization Management*, 3(3), 331-342.
- Brooks, C., & Manza, J. (2006). Why do welfare states persist?. *Journal of Politics*, 68(4), 816-827.
- Carter, L., & Bllanger, F. (2005). The utilization of e-government services: citizen trust, innovation and acceptance factors*. *Information systems journal*, 15(1), 5-25.
- Chanley, V. A., Rudolph, T. J., & Rahn, W. M. (2000). The origins and consequences of public trust in government: A time series analysis. *Public opinion quarterly*, 64(3), 239-256.
- Coleman, J. S. (1994).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Harvard university press.
- Coughlin, R. M. (1980). *Ideology, public opinion, & welfare policy: attitudes toward taxes and spending in industrialized societies* (No. 42). Univ of California Intl.
- Craig, S. C., Gainous, J., Room, F. H., & Martinez, M. D. (2006). Political trust and support for social welfare: The role of ambivalence. *In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Philadelphia, PA.
- Derks, A. (2005). Educational Stratification and Welfare Attitude in Six European Countries. *Paper for the Espane Conferenece* 2005. 22-24.

- Della Porta, D. (2000). Social capital, beliefs in government, and political corruption. *Disaffected democracies: What's troubling the trilateral countries*, 202–228.
- Edlund, J. (1999). Trust in government and welfare regimes: Attitudes to redistribution and financial cheating in the USA and Norwa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35(3), 341–370.
- Frazier, P. A., Tix, A. P., & Barron, K. E. (2004). Testing moderator and mediator effect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1), 115.
- Glaser, M. A., & Hildreth, W. B. (1999). Service delivery satisfaction and willingness to pay taxes: Citizen recognition of local government performance. *Public Productivity & Management Review*, 48–67.
- Gelissen, J. (2000). Popular support for institutionalised solidarity: a comparison between European welfare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9(4), 285–300.
- Goul Andersen, J. (2002). Coping with long-term unemployment: economic security, labour market integration and well-being. Results from a Danish panel study, 1994–1999.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1(3), 178–190.
- Hardin, R. (1999). Do we want trust in government?. *Democracy and trust*, 22–41.
- Hetherington, M. J. (1998). The political relevance of political trus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04), 791–808.

- Hetherington, M. J. (2005). *Why trust matters: Declining political trust and the demise of American liber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etherington, M., & Rudolph, T. J. (2011). Trust, Sacrifice, and Public Support for Health Care Reform. *In APSA 2011 Annual Meeting Paper*.
- Hibbing, J. R., & Theiss-Morse, E. (1995). *Congress as public enemy: Public attitudes toward American political institu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yle, R. H. (Ed.).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Sage Publications.
- Hyman, H. H., & Sheatsley, P. B. (1965). The current status of American public opinion. *Public Opinion and Propaganda*, 33–48
- Johnson, N. (1987). *The welfare state in transiti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welfare pluralism*. Univ of Massachusetts Press.
- Kim, S. E. (2005). The Role of Trust in the Modern Administrative State An Integrative Model. *Administration & Society*, 37(5), 611–635.
- Kluegel, J. R., & Miyano, M. (1995). Justice beliefs and support for the welfare state in advanced capitalism. Social justice and political change: public opinion in capitalist and post-communist states, 81–105.
- Kroneberg, C. (2010). The definition of the situation and variable rationality: The model of frame selection as a general theory of action. *Sonderforschungsbereich 504 Publications 06–05, Universitt Mannheim*.
- Lewin-Epstein, N., Kaplan, A., & Levanon, A. (2003).

- Distributive justice and attitudes toward the welfare state. *Social Justice Research*, 16(1), 1–27.
- Lipsmeyer, C., & Nordstrom, T. (2003). East versus West: comparing political attitudes and welfare preferences across European societies.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10(3), 339–364.
- Lyons, W. E., Lowery, D., & DeHoog, R. H. (1993). The politics of dissatisfaction: Citizens, services and urban institutions. *ME Sharpe*.
- Mayer, R. C., Davis, J. H., & Schoorman, F. D. (1995).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3), 709–734.
- Muller, E. & Zucam, T. (1977). On the meeting of political suppor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1:1561–1595.
- Mutz, D., & Flemming, G. (1999). How good people make bad collectives: A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 on public attitude. *In Congress and the decline of public trust* (Vol. 100). Westview Press, Boulder.
- Nagayoshi, K., & Sato, Y. (2014). Who supports redistributive policies in contemporary Japan? An integrative approach to self–interest and trust models. *International Sociology*, 29(4), 302–323.
- Newton, K., & Norris, P. (2000). Confidence in public institutions. *Disaffected democracies. What's troubling the trilateral countries*.
- Newton, K. (2001). Trust,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democracy.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2(2), 201–214.

-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ed.). NY. McGraw Hill.
- Nye, J. S., Zelikow, P., & King, D. C. (Eds.). (1997). *Why people don't trust govern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 Park, H., & Blenkinsopp, J. (2011). The roles of transparency and tru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rruption and citizen satisfaction.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77(2), 254–274.
- Pettersen, P. A. (2001). Welfare state legitimacy: ranking, rating, paying: the popularity and support for Norwegian welfare programmes in the mid 1990s.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24(1), 27–49.
- Pharr, S. J., Putnam, R. D., & Dalton, R. J. (2000). Introduction: What's Troubling the Trilateral Democracies?. *Disaffected Democracies: What's Troubling the Trilateral Countr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ierson, P. (2001). *The new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 Putnam, R., Leonardi, R., & Nanetti, R.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ainey, H. G. (1997). *Understanding and managing public organizations*. John Wiley & Sons.
- Rose, R. (1991). Is American public policy exceptional?. in Shafer, B. E. (Ed.) *Is America Different, : A new look at American exception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187–229.
- Rokeach, M.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Vol. 438).

New York: Free press.

- Rothstein, B. (1998). *Just institutions matter: the moral and political logic of the universal welfare stat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thstein, B. (2001). The universal welfare state as a social dilemma. *Rationality and society*, 13(2), 213–233.
- Rothstein, B., &Uslaner, E. M. (2005). All for all: Equality, corruption, and social trust. *World politics*, 58(01), 41–72.
- Ruscio, K. P. (1999). Jay' s pirouette, or why political trust is not the same as personal trust. *Administration & Society*, 31(5), 639–657.
- Rudolph, T. J., &Evans, J. (2005). Political trust, ideology, and public support for government spend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9(3), 660–671.
- Ryzin, G. G., Muzzio, D., Immerwahr, S., Gulick, L., &Martinez, E. (2004). Drivers and consequences of citizen satisfaction: An application of the Americ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 model to New York Cit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4(3), 331–341.
- Sears, D. O. (1982). *Tax revolt: Something for nothing in California*. Harvard University Press.
- Sims, H. (2001). Public confidence in government, and government service delivery (p. 41). *Ottawa: Canadian Centre for Management Development*.
- Sheppard, B. H., &Sherman, D. M. (1998). The grammars of trust: A model and general implic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3), 422–437.
- Steinmo, S. (1994). Rethinking American Exceptionalism. *The*

Dynamics of American Politics: Approaches and Interpretations.

- Stipak, B. (1979). Citizen satisfaction with urban services: Potential misuse as a performance indicator.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6–52.
- Svallfors, S. (1995). The end of class politics? Structural cleavages and attitudes to Swedish welfare policies. *Acta Sociologica*, 38(1), 53–74.
- Svallfors, S. (2002). Political Trust and Support for the welfare state: unpacking a supposed relationship. *B. Rothstein and Sven Steinmo, Restructuring the Welfare state, political institutions and policy change, New York, Palgrave*, 184–203.
- Taylor–Gooby, P. (1985). Attitudes to welfare. *Journal of Social Policy*, 14(01), 73–81.
- Thomas, C. W. (1998). Maintaining and restoring public trust in government agencies and their employees. *Administration & society*, 30(2), 166–193.
- Van de Walle, S., & Bouckaert, G. (2003). Public service performance and trust in government: the problem of caus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6(8–9), 891–913.
- Van de Walle, S., & Bouckaert, G. (2007). Public service performance and trust in government: the problem of caus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6(8–9), 891–913.
- Van Oorschot, W. (2000). WHY PAY FOR WELFARE? A SOCIOLOGICAL ANALYSIS OF REASONS FOR WELFARE. *The nether-lands Journal of Social*

Sciences. 46: 15–36.

- Vigoda–Gadot, Eran. (2006). Citizens' perceptions of politics and ethics in public administration: A five–year national study of their relationship to satisfaction with services, trust in governance, and voice orientation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7(2), 285–305.
- Welch, E. W., Hinnant, C. C., & Moon, M. J. (2004). Linking citizen satisfaction with e–government and trust in government.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5(3), 371–391.
- Wilensky, H. L. (1976). *The "new corporatism," centralization, and the welfare state*. Beverly Hills, CA: Sage.
- Winter, S., & Mouritzen, P. E. (2001). Why people want something for nothing: The role of asymmetrical illusion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39(1), 109–143.
- Whisman, M. A., & McClelland, G. H. (2005). Designing,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and moderator effects in family resear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1), 111.
- Wilson, J. (1995). *Political organiz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elch, E. W., Hinnant, C. C., & Moon, M. J. (2005). Linking citizen satisfaction with e–government and trust in government.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5(3), 371–391.

Abstract

The Effect of Welfare Status on Welfare Attitudes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rust
in government on the ‘material sacrifice’

Choi, Go Eu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a mechanism of welfare politics, since recipients of welfare benefits does not always match the welfare taxpayers, it is essential for contributors to agree with various distribution units. Thus,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e welfare attitudes as the expression of the interests of the citizens surrounding the welfare system and clarify the mechanisms leading to agreement and understanding of the contributors.

In this regard, ‘Material Sacrifice Theory’ originated by Hetherington(2005) hypothesized that the type of redistributive policies has resulted in individuals with a range of costs and

benefits, when the person has confidence in government, one can have a tendency to take the material sacrifices even if welfare costs are greater than welfare benefits. On the basis of this theory, this study was carried out by placing the objective to empirically analyze the hypothesis that the impact of the welfare status on the welfare attitudes is moderated by each individual's level of confidence in government. To do this, this study focused on the welfare status known as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welfare attitudes and measured the welfare status as a gap between 'welfare contribute' and 'welfare benefit' in a single dimension, which is defined as 'material sacrifice.' Also, this study examined the main effect of material sacrifice and trust in government on the welfare attitudes, a combination of 'support for the government's welfare responsibilities' and 'willingness to accept costs for welfare expansion' , and moderating effect of trust in government on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 sacrifice and welfare attitudes.

This study was performed with secondary data from 8th year of 「2013 Korea Welfare Panel Study」 . Also, this study used 4,214 cases applied to the weight of 4,185 cases who had completed the answer to 「Additional Investigation of Welfare Attitudes」 . Hypothesis of this study were verified using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

First, material sacrifice was found to be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welfare attitudes, 'support for the government's welfare responsibilities' and 'willingness to accept costs for welfare expansion.' In other words, welfare burden which has not been accompanied by current welfare benefit or potential

benefit inhibits the willingness to aggressively support expansion of welfare responsibility and funds of government.

Second, the confidence in which social policies will be carried out competently by government was found to b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willingness to accept costs for the welfare expansion.' On the other hands, it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support for the government's welfare responsibilities.' That is, while low level of confidence in the government's social policy skills drives the demand for welfare responsibilities of government, belief that the government would enforce social policies in an efficient and fair ways encourages citizens to have willingness to accept costs for welfare expansion.

Third, trust in government moderates the effect of material sacrifice on the welfare attitudes. In other words, the negative effect of material sacrifice on the 'support for the government's welfare responsibilities' and 'willingness to accept costs for welfare expansion' decrease when one has the higher level of confidence in government. This is the result that supports the 'material sacrifice theory' of Hetherington. If one has confidence in the social policy, it shows that one can have policy attitudes against the self-material interes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s as follows.

First, as the increase of material sacrifice has a negative main effect on the welfare attitudes, government should expand the range of the number of welfare beneficiaries and enhance the quality of such welfare status through the expansion and maturation of the welfare policies. It can be a strategy to lead a social consensus for the welfare expansion.

Second, as trust in government both effects directly on the welfare attitudes and moderates the effect of material sacrifice on the welfare attitudes, expanding reliance on the social policy is an important task to enable citizens to comply with the policies in spite of the material sacrifices they can have. In particular, in order to enhance the willingness to financially contribute, which can actually enables the welfar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it is required to build a social trust that tax is administered in an efficient and fair ways, and the payed taxes will return as welfare benefits to them in the long run.

Third, in the welfare terrain in Korea where people's experience of welfare is limited, it is required to increase the 'sense of welfare experience'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number of welfare beneficiaries in order to promote confidence in the social policies. Furthermore, government must disclose direct and transparent in-depth information on procedures, processes and results of social policy enforcement so that even citizens who do not directly benefit from the welfare system can confirm that government has a commitment with expertise in social policy and uses the financial resources efficiently. It will give legitimacy to the redistributive policies and drive pro-welfare awarenes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measures the welfare status as a gap between 'welfare contribute' and 'welfare benefit' in a single dimension. In particular, unlike existing studies that have focused on the 'potential' material sacrifice depending on the possibilities of welfare benefit, this study measures 'real' material sacrifice, gap between welfare contribute and benefit in the general welfare system. It allows to

prove empirically the substantial and concrete impact of material interest which one has as welfare beneficiary or welfare taxpayer on the welfare attitudes in current politics of Korean welfare state. Furtherm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trust issue regarding government that has not been treated well as symbolical factors affecting the welfare attitudes, thus analyzes empirically the impact of confidence in government in the welfare politics.

Despite these implications, this study has few limitations. This study has some problems with the reliability of measurement because 'welfare contribute' measured by individual respondents' reporting while the measurement of 'welfare benefit' used information provided in community centers. Also,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secondary data, the concept of trust in government was only limited to the 'functional confidence in social policy.' Follow-up studies are needed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Key words : welfare status, welfare benefit, welfare contribute, material sacrifice, trust in government, welfare attitudes

Student Number : 2013-22837